

제 21대 대통령 선거 :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평을 기대하다

법무법인(유)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2025. 6. 4.

Contents

I.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후보 당선	2
II.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비전 및 공약	4
III.	대한민국, 새로운 지평을 위한 9대 아젠다(Agenda)	9
IV.	공약 분석 기반의 예상 시나리오	26
V.	기업의 대응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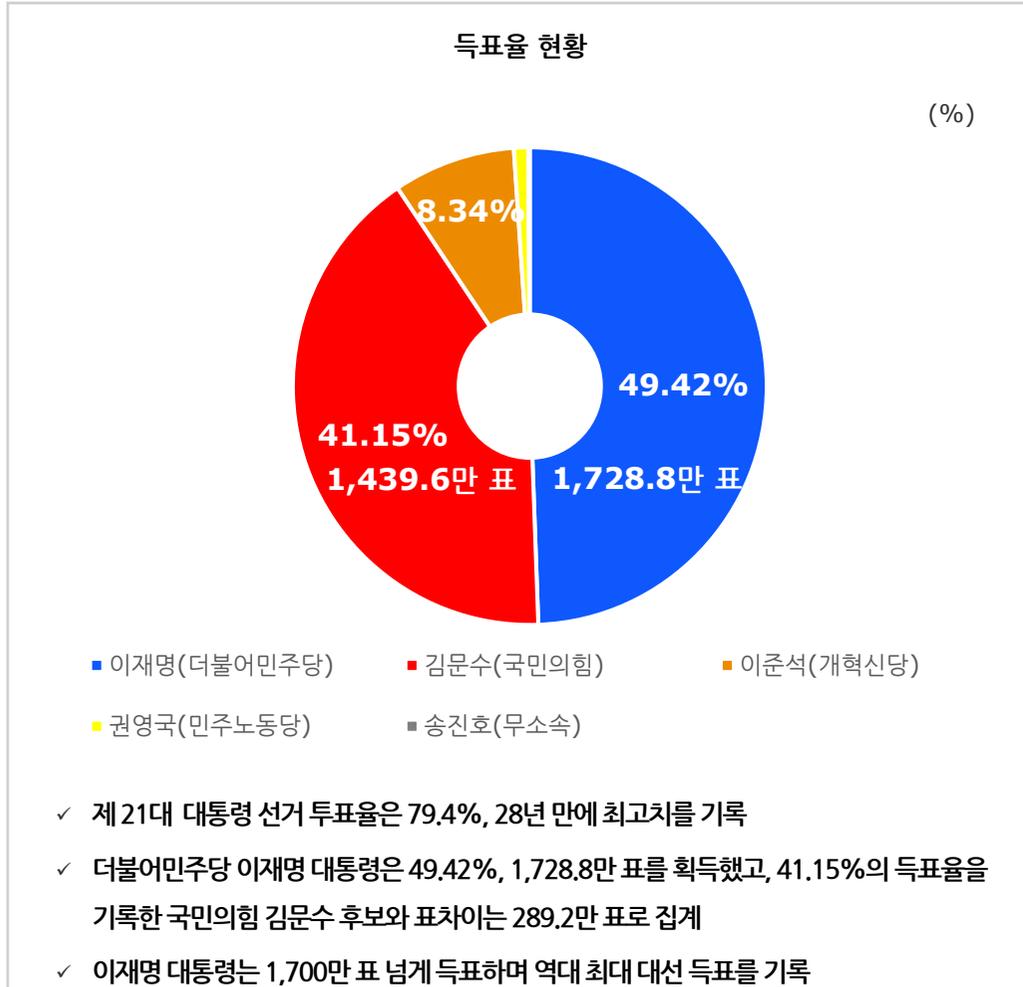
I.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후보 당선

I. 대한민국 제 21대 대통령, 이재명 후보 당선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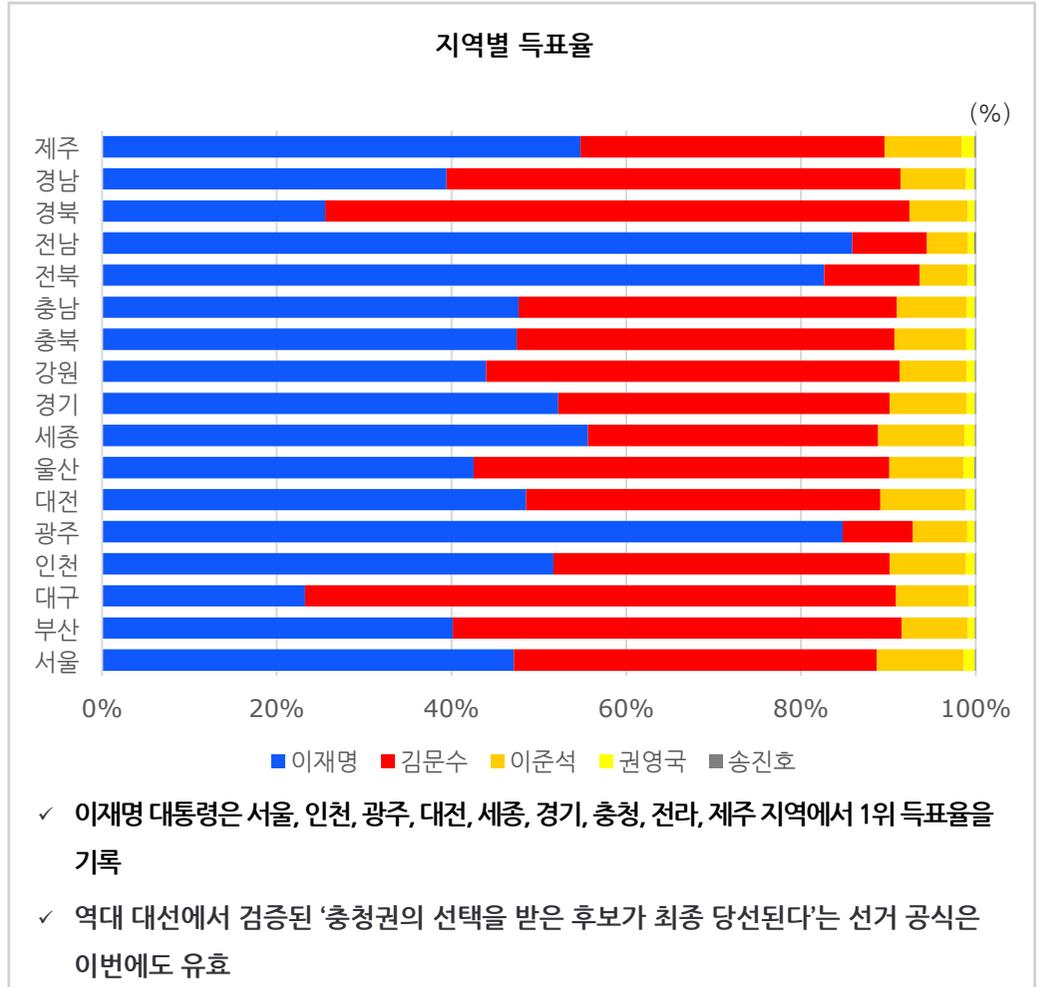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대한민국은 정치적 리더십의 전환과 함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출발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역대 최다 득표



Source: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스윙보트 충청권 선택 받은 이재명 대통령



Source: 중앙선거관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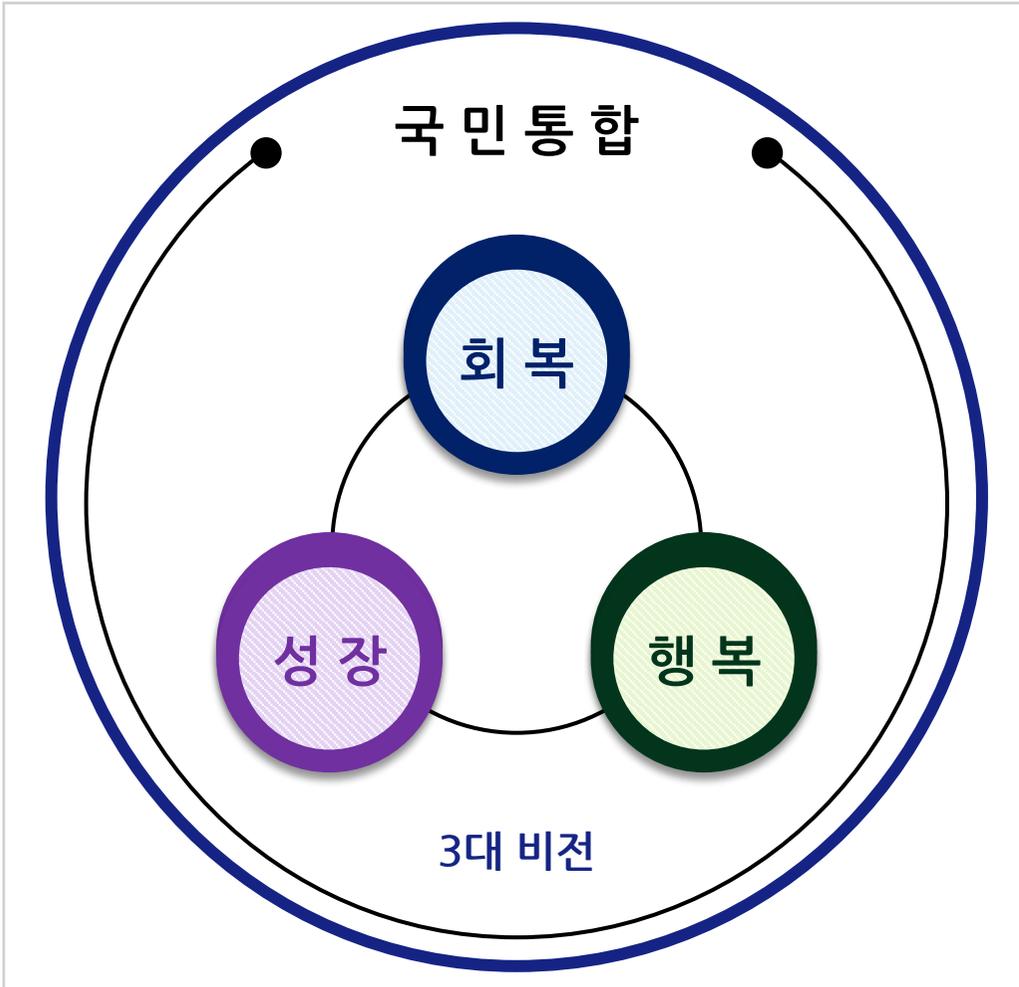
II.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비전 및 공약

II.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비전 및 공약

1. 국정 운영 비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은 회복·성장·행복 3대 비전을 바탕으로 경제, 외교안보, 문화, 민주주의, 복지 5대 강국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대 비전



5대 강국 비전

- ① K-이니셔티브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 ✓ 정부 및 민간 투자 확대 및 AI 국가인재 양성
 - ✓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 ✓ 고성능 GPU 확보
 - ✓ ABCDEF(AI, 바이오/헬스케어, 콘텐츠/문화, 방위산업/우주항공, 에너지, 제조업) 글로벌 육성 프로젝트 추진
 - ✓ 추가 지수 5,000 시대 개막
 - ✓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 ② 세계적인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국익 중심 실용외교 추진
 - ✓ 경제·통상 위기 극복 위한 경제외교 강화
 - ✓ AI·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육성
 - ✓ 군장병 복무여건 개선
 - ✓ 방위산업 4대 강국 달성
 - ✓ 지정학적 안보리스크 해소
- ③ 세계문명을 선도하는 소프트파워 '문화 강국'**
 - ✓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 개막
 - ✓ 문화예술 인재 양성
 - ✓ 창작공간 및 비용 등 지원 강화
 - ✓ 인문학 지원 확대
 - ✓ 전국민 인문교육 활성화 추진
 - ✓ 콘텐츠 불법 유통 단속 강화
- ④ 통합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강국'**
 - ✓ 민주주의 위상 회복
 - ✓ 정치보복 관행 타파 및 탕평인사로 국민 대통합
 - ✓ 국민 정책참여 확대 위한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
 - ✓ 세종 행정수도과 '5극 3특' 중심 국토균형발전 실현 추진
- ⑤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
 - ✓ 빈틈없는 사회 안정망 구축
 - ✓ 돌봄 국가 책임제 도입 및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 추진
 - ✓ 의료공공성 강화
 - ✓ 사람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
 - ✓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및 정년 연장 추진
 - ✓ 노동자 권리 보장 추진 및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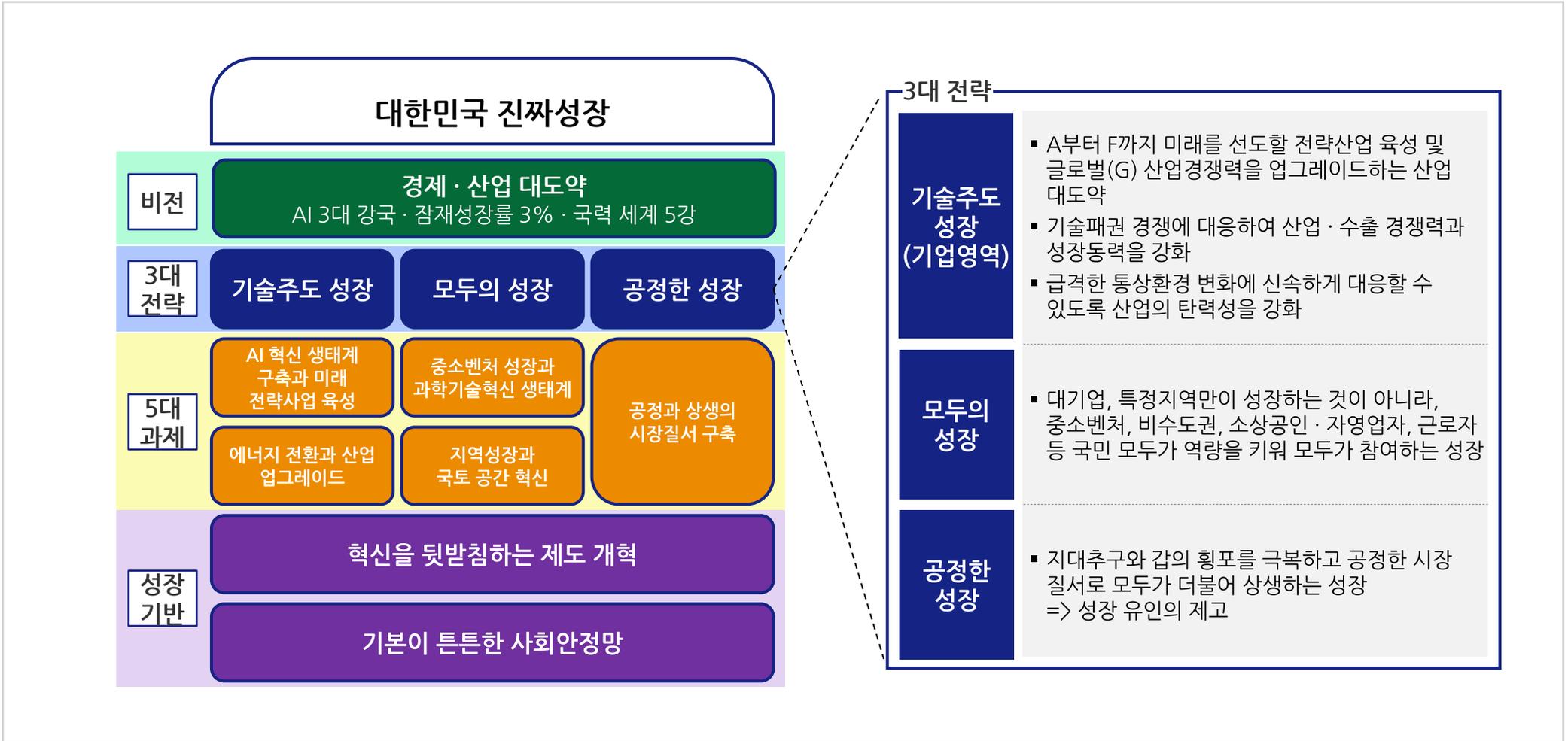
Source: 더불어민주당.

II.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비전 및 공약

2. 주요 공약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체질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 모두가 과실을 함께 누리는 체감형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분야별 공약을 제안하였습니다.

진짜성장 개념도 및 전략



Source: 더불어민주당.

II.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비전 및 공약

[Back-up] 분야별 공약 세부 내용

정책	목표	이행방법
[경제·산업]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 K-콘텐츠 지원강화로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능 대전환(AI)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위한 글로벌 소프트웨어 Big5 문화강국을 실현 K-방산을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방안 마련 벤처투자시장 육성으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실현 스마트 데이터농업 확산,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K-푸드 수출 확대, R&D강화, 농생명용지 조기 개발로 농업을 미래농산업으로 전환·육성
[경제·산업]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계와 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 마련 소상공인 금융과 경영부담 완화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활기 도모 공정하고 지속가능하며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제 구축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추진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담전가 방지로 원리금상환부담 경감 채무자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 전세사기 걱정 없는 사회, 부담없는 전월세로 서민의 주거사다리 주식시장 수급여건 개선 및 유동성 확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협상권 부여로 제값받는 공정한 경제 창출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등 기술탈취 행위 강력 근절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통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
[외교·통상]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적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경제외교 추진 우리의 외교영역을 확대하고 다변화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무역구조 혁신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 분위기 조성 군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능력 확보 국제사회에서의 공헌과 국력에 걸맞은 외교 추진 수출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안보 단속체계 확립 전략물자 국적선박 확보를 통한 물류 안보 실현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등 주요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행정·경제·산업] 세종 행정수도 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 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종 행정수도 완성 5극(5대 초광역권: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3특[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종 행정수도 완성 추진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 추진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투자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촉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 달성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철도지하화 대상 구간 차질없는 추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단계적 시행 지역·중소방송사의 지역밀착형 콘텐츠 제작 지원 및 확대 등 활성화 적극 지원

II.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비전 및 공약

[Back-up] 분야별 공약 세부 내용

정책	목표	이행방법
[교육·경제·복지]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 노동 존중,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존중 사회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환경 •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지표 마련을 위한 임금분포제 도입 • 산업/업종/지역단위 단체교섭협약 활성화로 저임금노동자들의 기본 노동조건 보장 •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제도 도입 •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 일하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 • 주4.5일 도입/확산 등으로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 감축 • 공무원 처우개선 및 공직문화 개선
[경제·복지]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1. 생활안정과 생활비절감 추진 2. 빈틈없이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구축 • 온 사회가 다 같이 돌보는 돌봄기본사회 추진 •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주거·통신 등 필수적인 생활비 부담 절감 • 청년·국민·어르신 패스 3종 도입으로 국민 교통비 절감 • 국가책임 공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청년주거 환경 개선 •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 • 문화예술인 사회보험보장 확대 및 복합지원공간 확충 • 1인가구·청년을 위한 정책 확대 •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확대 등 안정적인 생활환경 지원 강화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
[교육·복지]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1. 저출생·고령화 해소 및 돌봄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생 대책 혁신 및 자녀양육 지원 확대 •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한 돌봄·교육,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등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 구축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환경·산업]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에 걸맞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가속화 •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 탄소중립 산업전환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 • 전기차 보급 확대 및 노후경유차 조기 대·폐차 지원을 통한 수송부문 탈탄소 가속화 • 영농형태양광 적극 보급, 친환경경유기농업 확대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농업 탄소배출량 저감 추진 • 탈플라스틱 국가 로드맵 수립 및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육성 지원

III. 대한민국, 새로운 지평을 위한 9대 아젠다(Agenda)

III. 대한민국, 새로운 지평을 위한 9대 아젠다(Agenda)

0. 9대 아젠다 전략 개요

“대한민국이 저성장과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의 비전과 성장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9대 전략 아젠다를 제시합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지평 ‘9대 아젠다’ 전략 개요

구분	전략 아젠다	주요 내용
대	대전환 성장 구조 (Transformative Growth)	저성장 돌파, 잠재성장률 제고, 성장 동력 재구축
한	한국형 산업고도화 (K-Industrial Leap)	첨단 산업 육성, 신성장 동력 확보, 산업 구조 고도화
민	민간 역동성 & 투자 활성화 (Market Dynamism & Investment Boost)	글로벌 기업 환경 조성, 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투자 활성화
국	국가 기술 주권 확보 (Tech Sovereignty)	한국형 기업가형 국가 모델 구축, 미션지향형 R&D, 초격차 기술 확보, 지역 혁신 강화
새	새로운 문화/소프트 파워 국가 (Cultural & Soft Power)	K-콘텐츠, 문화 외교, 글로벌 위상 강화
로	로컬 균형 발전 (Balanced Regional Growth)	지방 소멸 대응, 혁신 클러스터, 인구 분산
운	운영형 통상 및 경제 안보 (Operational Trade & Economic Security)	실행력과 실질적 성과 기반의 통상 및 외교 전략, 공급망 대응, 해외시장 다변화
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경제 (Carbon-Neutral Economy)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그린 산업 활성화
평	공평사회 & 신뢰 거버넌스 구축 (Equitable Society & Trust-Based Governance)	제도 신뢰 회복, 사회적 대타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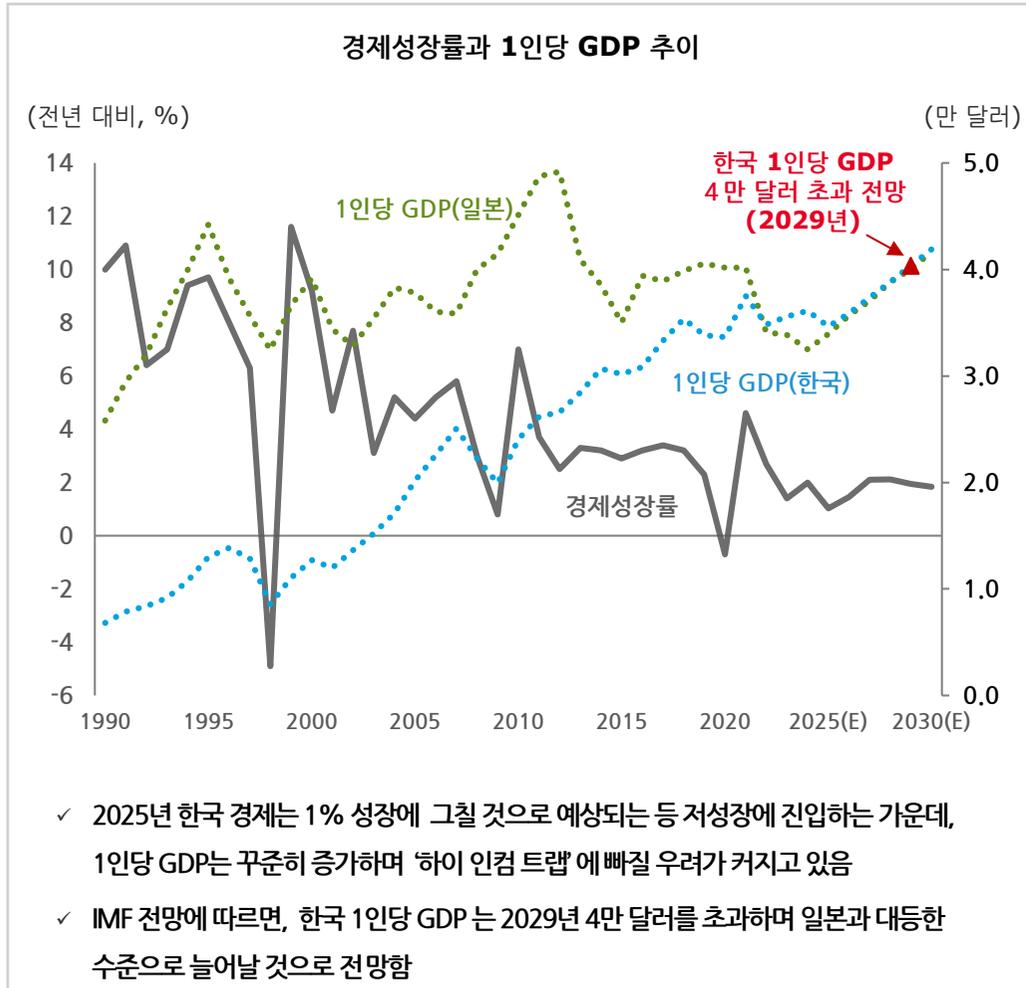
Source: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III. 대한민국, 새로운 지평을 위한 9대 아젠다(Agenda)

1. 대전환 성장 구조(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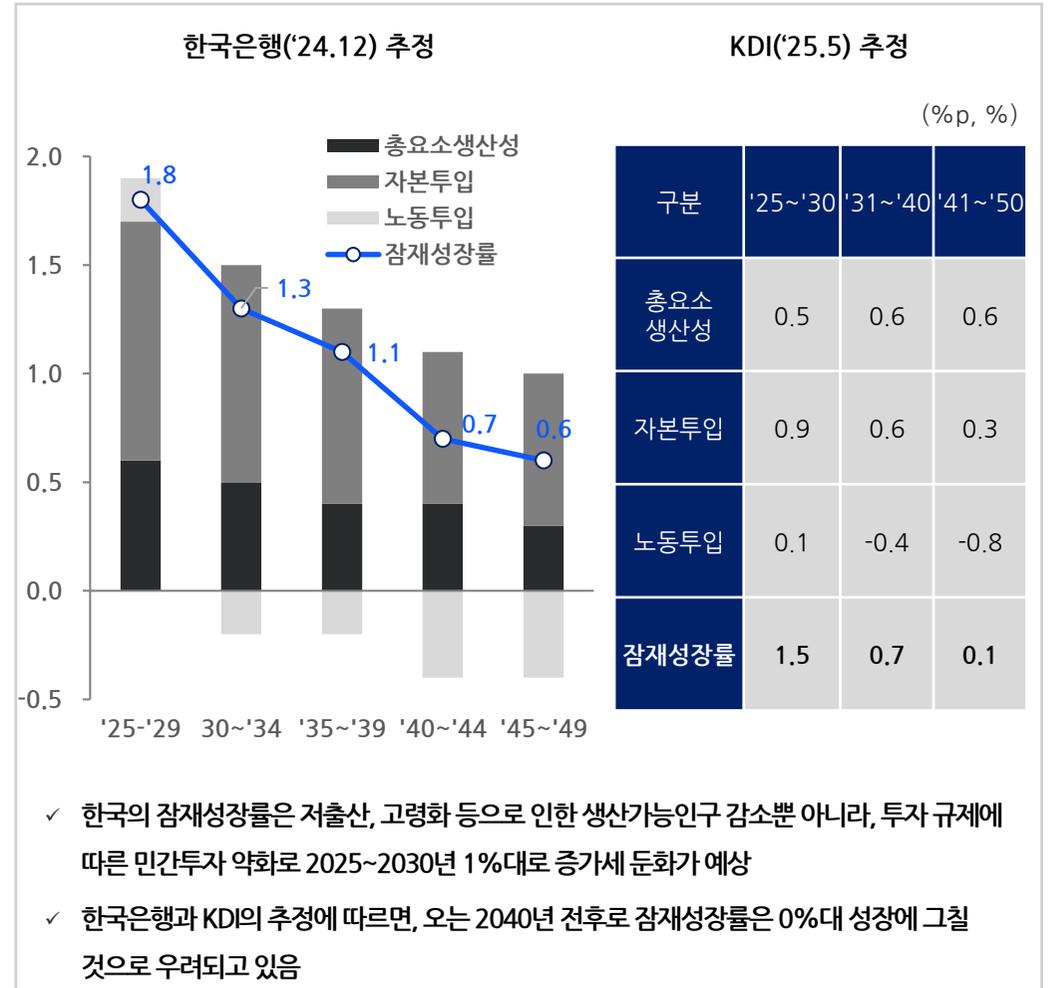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경제성장률이 1%대로 예상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뿐 아니라 민간투자 약화 등으로 향후 잠재 성장률이 0%대의 성장에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민간 역동성을 회복하고, 산업구조와 성장엔진을 재설계하는 '대전환 성장 구조' 구축이 시급합니다.

하이 인컴 트랩(High-income Trap) 기로에 선 한국 경제



Source: IMF,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0%대로 추락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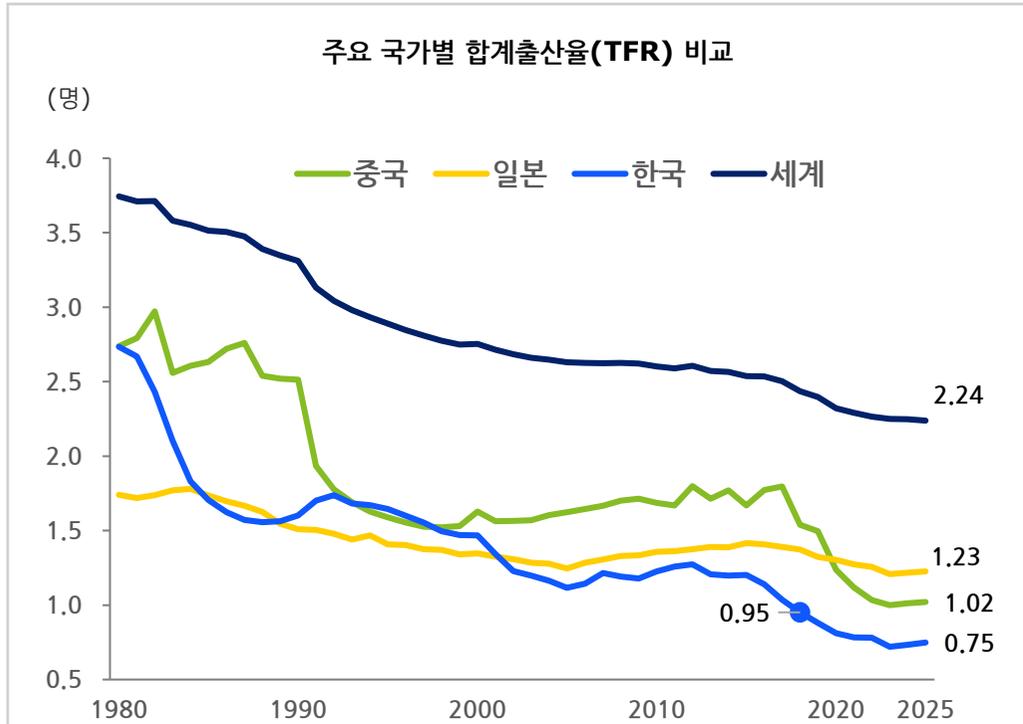
Source: 한국은행, KDI,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III. 대한민국, 새로운 지평을 위한 9대 아젠다(Agenda)

1. 대전환 성장 구조(2/2)

2018년부터 1명 이하의 낮은 합계출산율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5년부터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이른바 '초고령사회' 진입이 현실화되면서 저출산·고령화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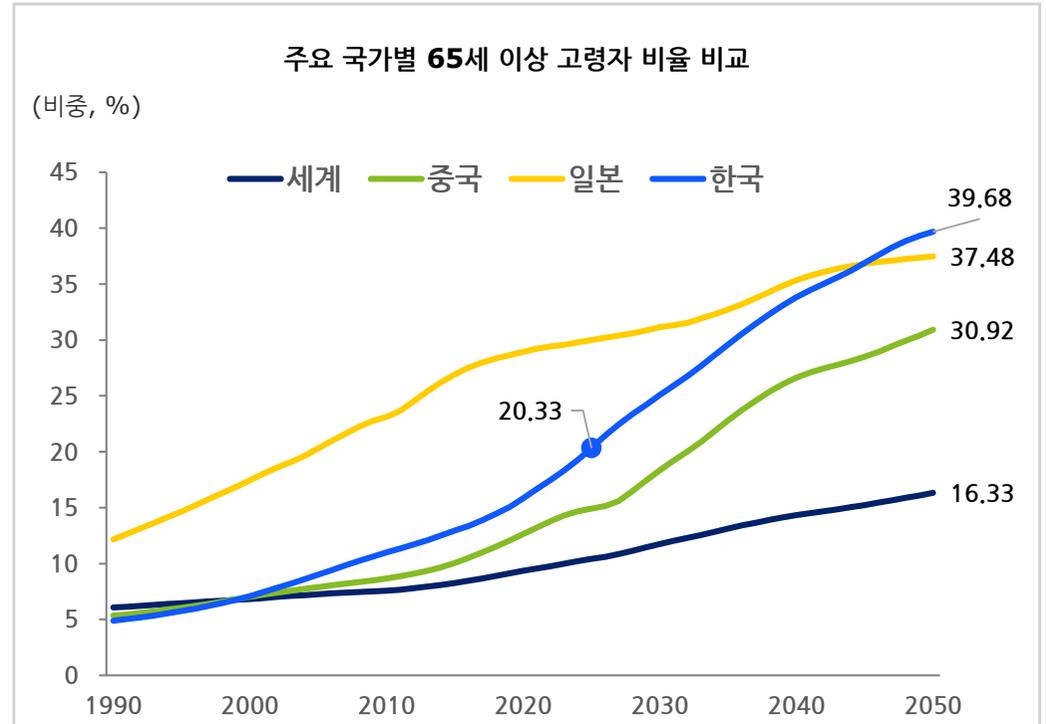
전세계 수준과 큰 격차를 보이는 합계출산율



- ✓ UN의 "World Population Prospects"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중위수(Median) 기준으로 2025년 0.75명으로 지난 2018년부터 1명 미만으로 추락
- ✓ 이는 동시점 일본 1.23명, 중국 1.02명보다 낮은 수준이며, 2.24명인 전세계 수준보다 크게 낮은 수치

Source: UN.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진입하는 한국 경제



- ✓ 한편, 한국은 2025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0.33%를 기록,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추정
- ✓ 더욱이 향후 2050년 동기 준 약 40%에 이르며 일본 37.5%를 추월하는 등 동북아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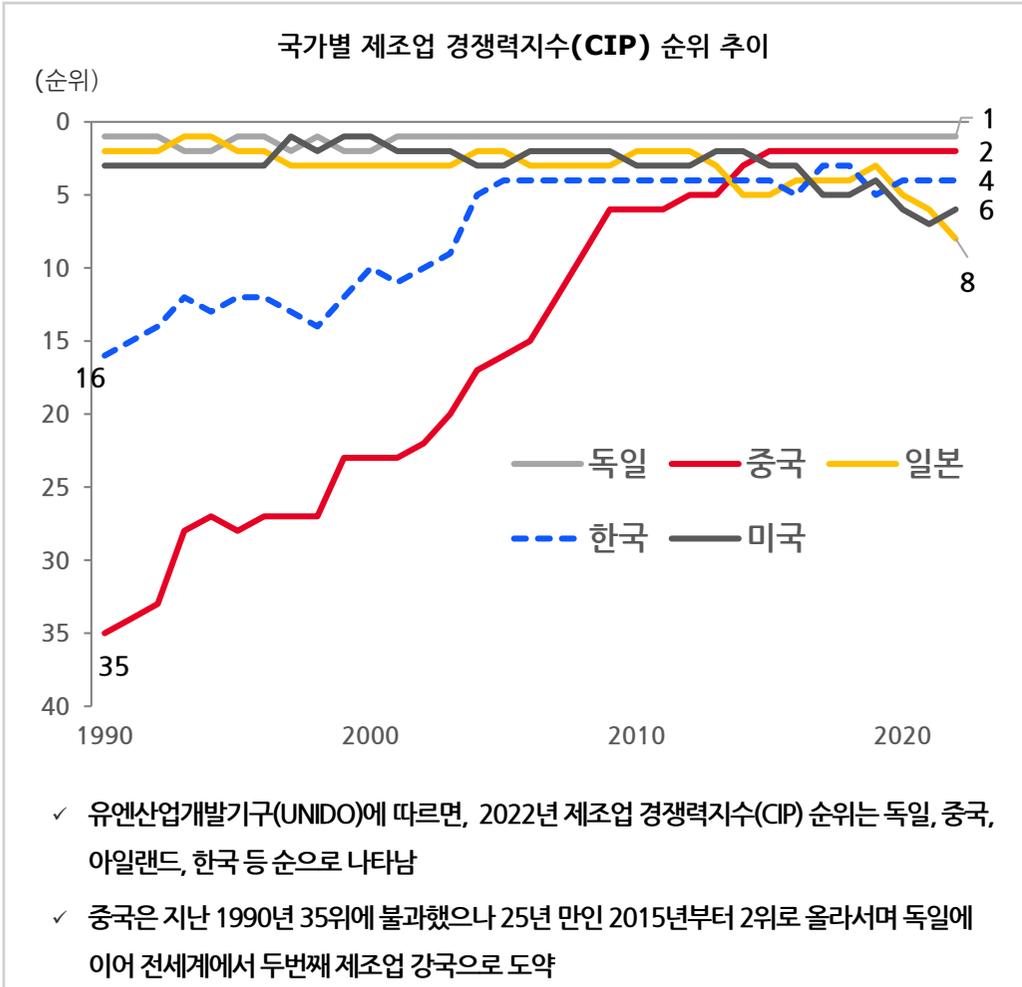
Source: UN.

III. 대한민국, 새로운 지평을 위한 9대 아젠다(Agenda)

2. 한국형 산업고도화(1/2)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세계 4위권 수준으로 비교 우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나,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향후 미래 산업을 선도할 첨단산업 부문에서 중국의 위협이 거세지면서 경쟁력 확보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거세지는 글로벌 제조업 경쟁



Source: UNIDO.

첨단제조업 우위를 점하는 중국기업의 공세

반도체 및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기업 랭킹(2024년 기준)

순위	업체(반도체)	M/S(%)	순위	업체(배터리)	M/S(%)
1	엔비디아	11.7	1	CATL	38.0
2	삼성전자	10.0	2	BYD	15.0
3	인텔	7.6	3	LGES	10.0
4	SK하이닉스	6.7	4	EVE	5.0
5	퀄컴	5.0	5	CALB	5.0

- ✓ 산업별로 반도체의 경우 Top 5위 내에 미국, 한국 등의 기업이 여전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전기차 배터리(이차전지)는 Top 5 중 4곳이 중국기업으로 조사됨
- ✓ 특히,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Top 5 내 중국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63%에 이르는 등 사실상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은 중국이 장악한 것으로 나타남

Source: Gartner, SNE research.

III. 대한민국, 새로운 지평을 위한 9대 아젠다(Agenda)

2. 한국형 산업고도화(2/2)

관세와 첨단산업의 관계는 단순한 무역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패권 경쟁과 산업 안보 전략, 보호무역주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핵심 축입니다. 주요국은 관세 정책과 보조금, 내국민 우선 조달 규정 등을 결합해 자국 첨단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도 반도체, AI, 바이오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전략 육성이 필요합니다.

미흡한 중장기적 첨단제조업 정책의 연속성

주요국의 첨단제조업 육성 정책 방향

구분	주요 내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과학법(2022.8)’, ‘인플레이션 감축법(2022.8)’, ‘바이오 제조 및 기술 이니셔티브(2022.9)’ IRA 상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에 ‘해외우려집단(FEOC)’ 적용 추진(2025.5) ‘스타게이트 이니셔티브(2025.1)’ 를 통해 AI 인프라 구축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통해 경쟁국 추월 및 미래성장동력 설계 최근에는 ‘14차 5개년 플랜(2021~2025)’에 이어 2025년 10월 ‘15차 5개년 플랜(2026~2030)’ 예상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0 Digital Compass(2021.3)’, ‘유럽반도체법(Chips for Europe Act,2023.9)’ 등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디지털산업전략(2023.6)’ ‘경제안전보장추진법(20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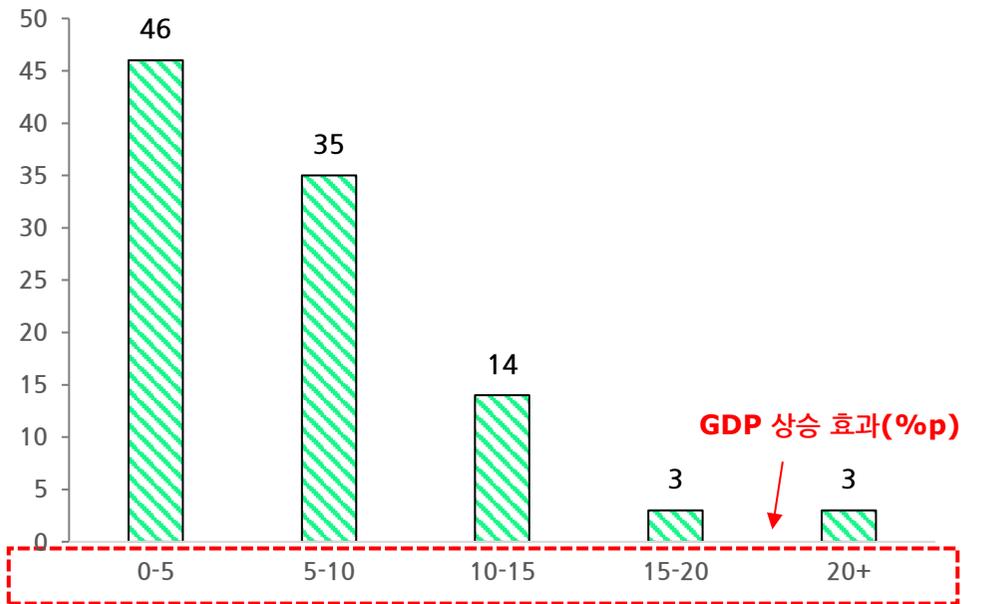
- ✓ 미국은 트럼프 2기로 들어서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한 CHIPS, IRA 등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정책이 추진 중이며, 최근에는 AI 등 신성장 동력 차원의 첨단제조업 육성안을 제시
- ✓ 중국도 2025년으로 마무리되는 ‘중국제조 2025’를 대체하는 새로운 첨단제조업 전략이 15차 5개년 플랜을 통해 제시될 전망

Source: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향후 10년 AI는 글로벌 경제의 약 10% 좌우 영향이 예상

AI가 전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의견(2035년 전망)

(응답률, %)



- ✓ World Economic Forum(2025년) 설문에 따르면, 주요 경제전문가들의 35%는 미래 신성장 산업의 핵심이 될 AI 산업이 2035년 전세계 GDP의 약 5~10%p 상승 효과가 있다고 응답
- ✓ 한편, 15%p 이상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Source: World Economic Forum.

III. 대한민국, 새로운 지평을 위한 9대 아젠다(Agenda)

3. 민간 역동성 & 투자 활성화(1/2)

한국은 고도화된 인프라와 기술 기반에도 불구하고, 투자 매력도 및 기업 친화적 환경에서 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업 생태계의 확장과 해외직접투자(FDI) 유치를 위한 전략적 전환이 요구됩니다.

높은 법인세율과 실질 부담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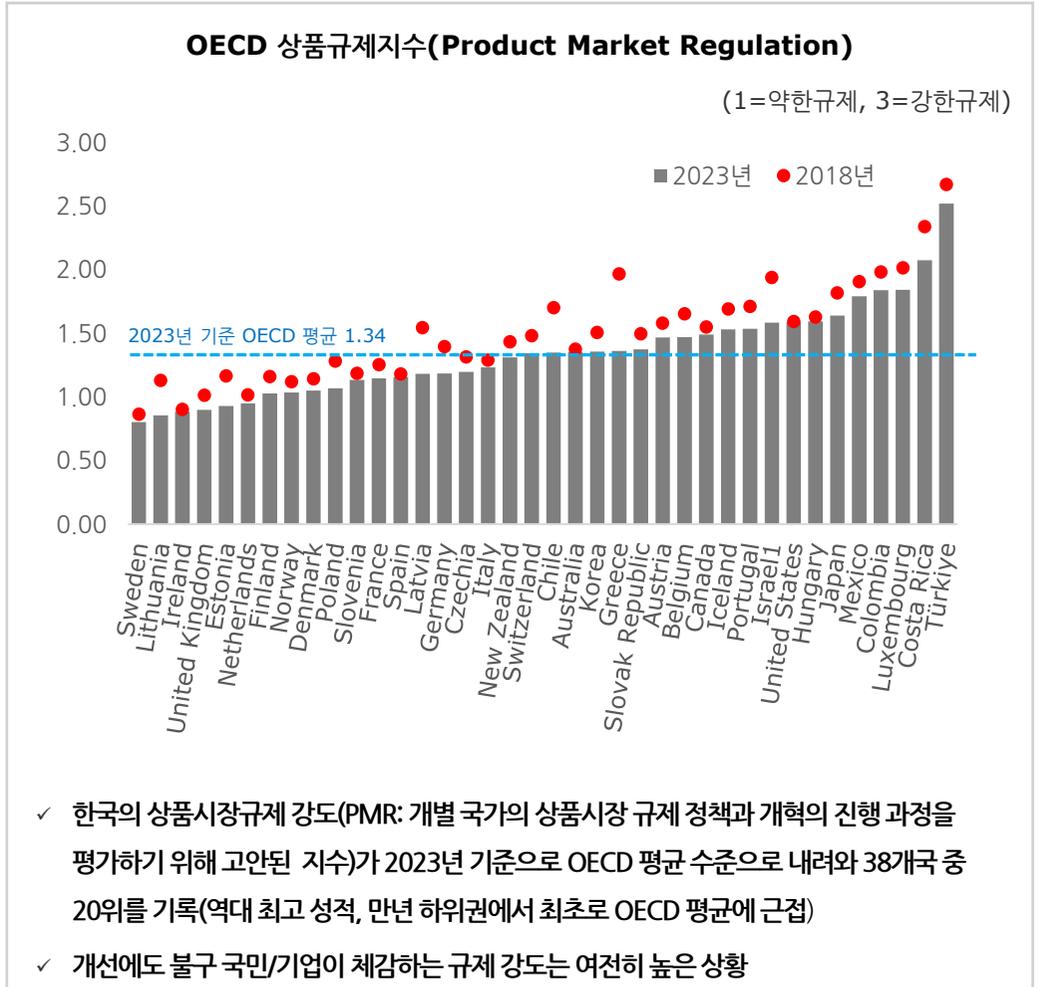
OECD 38개국 중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및 유효세율 상위 11개국 (%)

순위	명목 최고세율(2022)	명목 최고세율(2023)	유효세율(2022)
1	콜롬비아 35.0	콜롬비아 35.0	칠레 36.3
2	포르투갈 31.5	포르투갈 31.5	콜롬비아 29.2
3	호주 30.0	호주 30.0	호주 28.5
4	코스타리카 30.0	코스타리카 30.0	뉴질랜드 27.6
5	멕시코 30.0	멕시코 30.0	포르투갈 27.7
6	독일 29.9	독일 29.9	일본 27.5
7	일본 29.7	일본 29.7	독일 27.0
8	뉴질랜드 28.0	뉴질랜드 28.0	한국 25.0
9	이탈리아 27.8	이탈리아 27.8	오스트리아 24.8
10	한국 27.5	칠레 27.0	벨기에 24.4
11	칠레 27.0	한국 26.4	코스타리카 24.3
OECD 평균		23.6	21.9

- 2000년 이후 한국은 글로벌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서 뒤처졌고,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OECD 34개국 중 2023년 11위로 2000년 22위보다 높아짐
- 2022년 법인세 유효세율(해당국가의 기업이 적용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 수준)도 OECD 34개국 중 8번째로 높은 수준

Source: OECD, 한국경제자총협회.

규제 개선을 통한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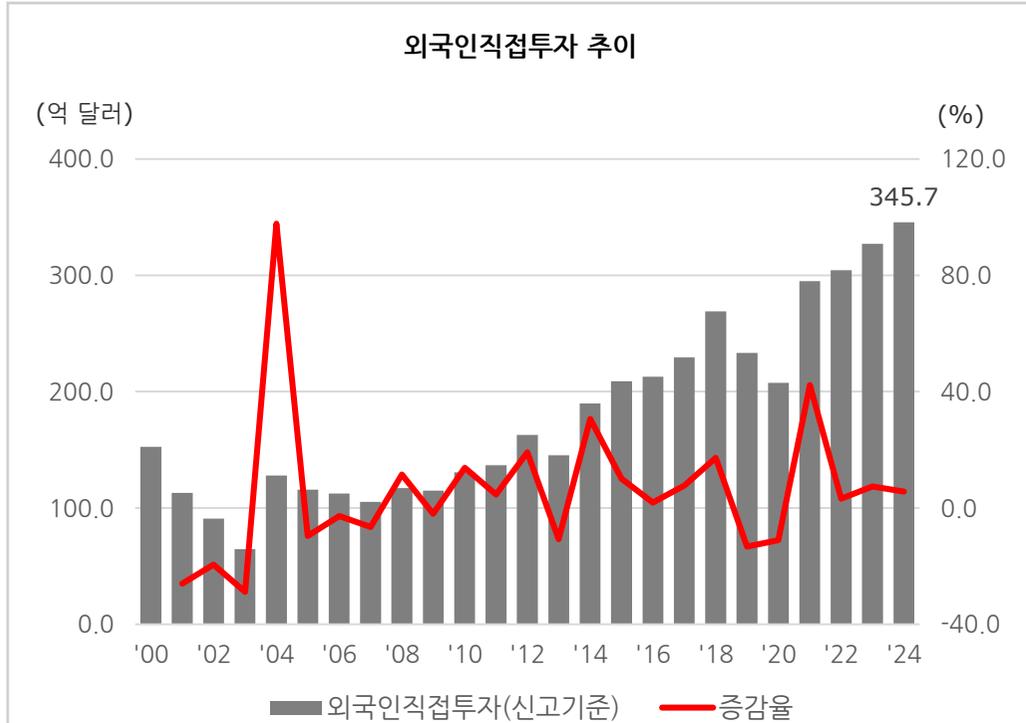
Source: OECD.

III. 대한민국, 새로운 지평을 위한 9대 아젠다(Agenda)

3. 민간 역동성 & 투자 활성화(2/2)

한국 기업의 전반적인 역동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 올리기 위해 핵심기반인 기업 성장 생태계 구축과 기업 친화적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리쇼어링뿐 아니라 적극적인 기업의 투자 유인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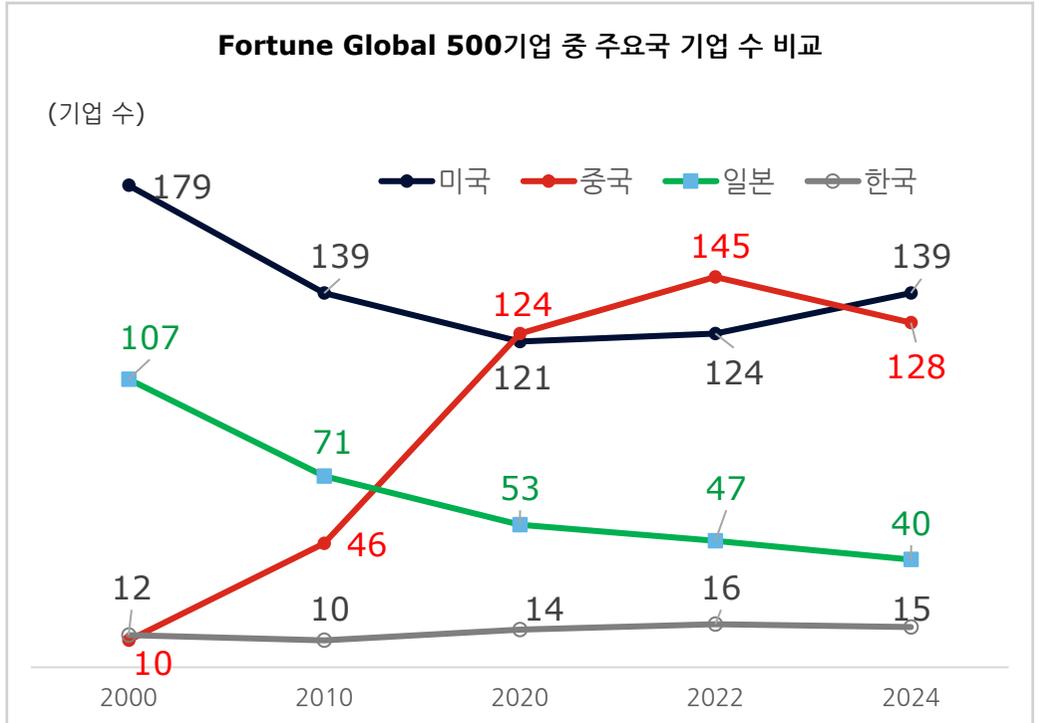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세 유지



- ✓ 2024년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345.7억 달러로 전년 대비 5.7% 증가, 다만 증가폭은 축소
- ✓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중심 부문으로 증가
- ✓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첨단산업 인센티브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환경 조성 등이 필요

Source: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위상 하락에 따른 기업 생태계 강화



- ✓ 2024년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중 한국 기업은 15개로 2022년 16개, 2023년 18개 보다 축소(평균 순위 전반적으로 하락, 100위 기업 내 한국 기업은 3개에 불과)
- ✓ 유니콘팩토리(2025.03.23)에 따르면, 국내 신규 유니콘 기업 수는 2020년 3개에서 2021년 8개, 2022년 9개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4개, 2024년 2개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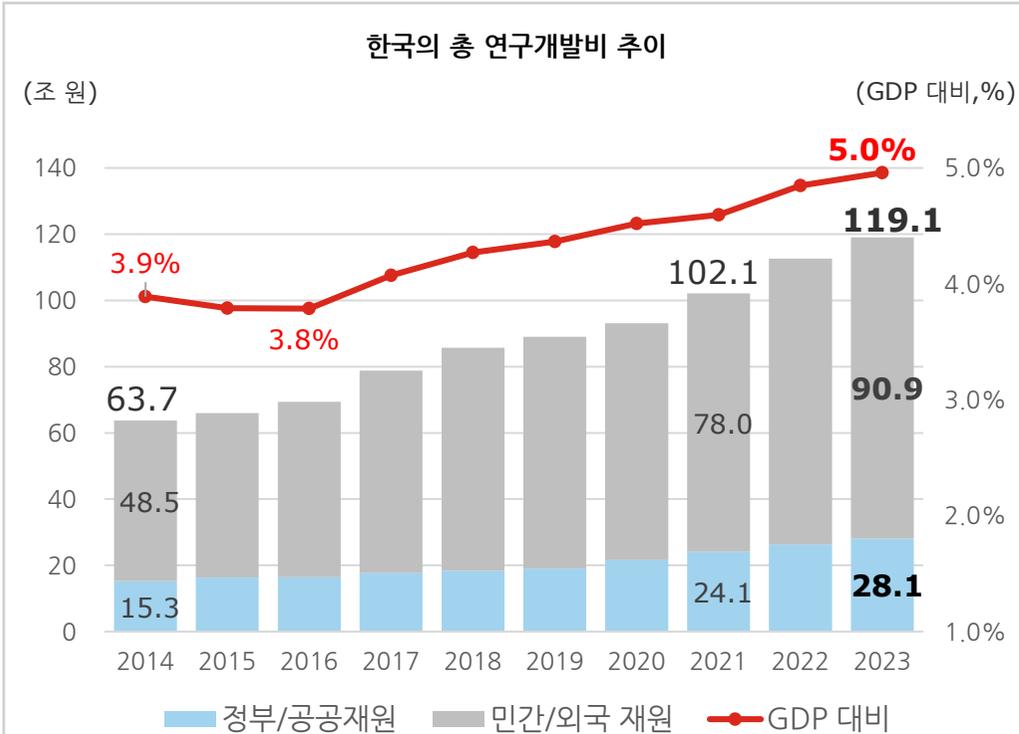
Source: Fortune, 유니콘팩토리.

III. 대한민국, 새로운 지평을 위한 9대 아젠다(Agenda)

4. 국가 기술 주권 확보(1/2)

한국은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부존 자원의 한계 경제를 극복하고 지식 자본 축적에 주력해 왔으며,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꾸준한 R&D 투자가 필요합니다. 잠재성장률 하락과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R&D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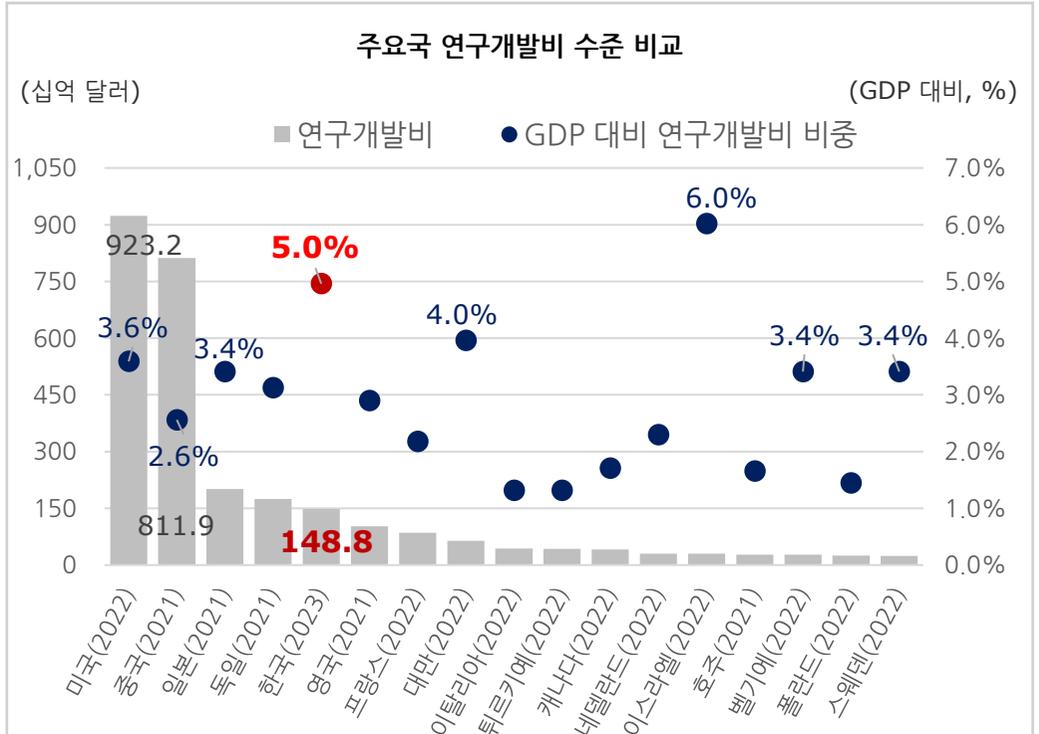
2021년, R&D 100조 시대 돌입



- ✓ 총 R&D 투자(정부+민간) 규모는 2021년 100조 원을 돌파하였으며, 2023년에는 119.1 조 원에 달함
- ✓ 2023년 기준 자원별 연구개발비는 정부/공공재원 28.1조 원, 민간/외국재원 90.9조 원으로 비율이 23.6: 76.4으로 민간/외국 비중이 높은 구조

Sourc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개발비 규모 세계 5위 수준



- ✓ 구매력평가 환산 기준 한국의 연구개발비는 1,488억 달러(2023년 기준)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 규모 수준
- ✓ 2023년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4.95%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 수준, 이는 OECD 평균(2.3%)과 G7 평균(2.6%)을 크게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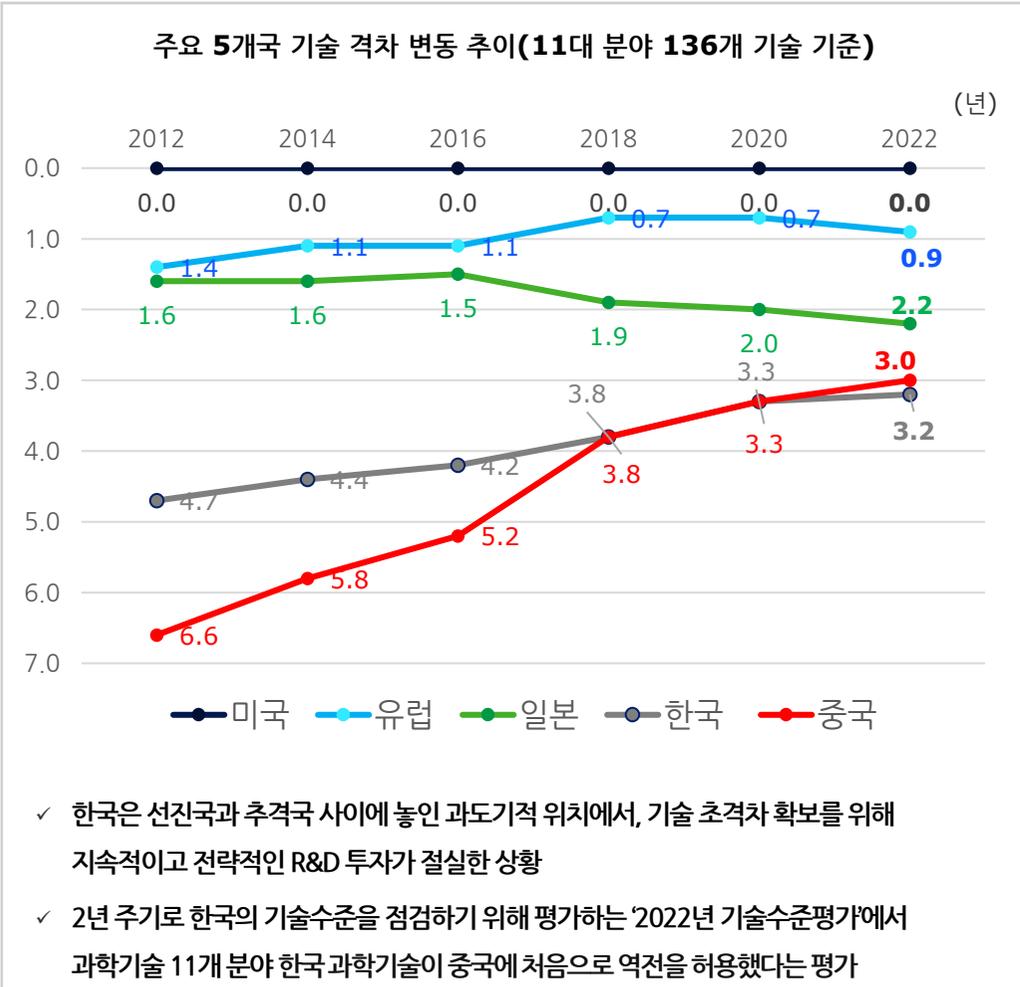
Source: OECD.

III. 대한민국, 새로운 지평을 위한 9대 아젠다(Agenda)

4. 국가 기술 주권 확보(2/2)

R&D 투자의 총량 확대와 함께 질적 전환(사업화 연계, 지역균형 등)이 병행될 때 한국은 미래 성장과 기술자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국가혁신시스템은 이제 선도형 R&D 중심의 전략적 혁신 체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기술 선진국과 추격국 사이에 놓인 한국



Source: 국가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국가혁신시스템의 개선 필요성

국가혁신시스템의 역동성, 효율성, 균형성 제고	
구분	주요 내용
R&D 투자의 경제적 가치 창출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초상위권(세계 2위)이나 이에 따른 과학/기술적 성과 대비 경제적 성과로의 확산은 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창출(논문, 특허 등)은 세계 4위 / 지식확산(IP 수입, 하이테크 수출 등)은 세계 13위(WIPO, 2024) 생산성 제고 효과는 상대적으로 선진국 비해 낮음. 한국의 공공 R&D 투자는 민간 R&D, 중요소 생산성, 국내 총생산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일본, 독일, 미국 등에 비해 생산성 제고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STEPI, 2023)
지역혁신시스템(RIS) 활성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에 집중된 혁신 자원 & 성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존재하나 그 격차는 점차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비: 수도권 70.2%, 대전 9.3%, 그 외 지역 20.5% 연구원: 수도권 67.0%, 대전 6.6%, 그 외 지역 26.4% 출원특허 성과: 수도권 45.1%, 대전 17.6% 그 외 지역 37.2%

- ✓ 기획·집행·성과 확산 전 단계의 효율성과 연결성을 제고할 구조적 전환을 통해 논문/특허 중심의 성과가 산업 및 사회적 파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설계
- ✓ 수도권에 집중된 혁신 자원의 편중은 지역간 기술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해 지역혁신의 균형있는 발전이 필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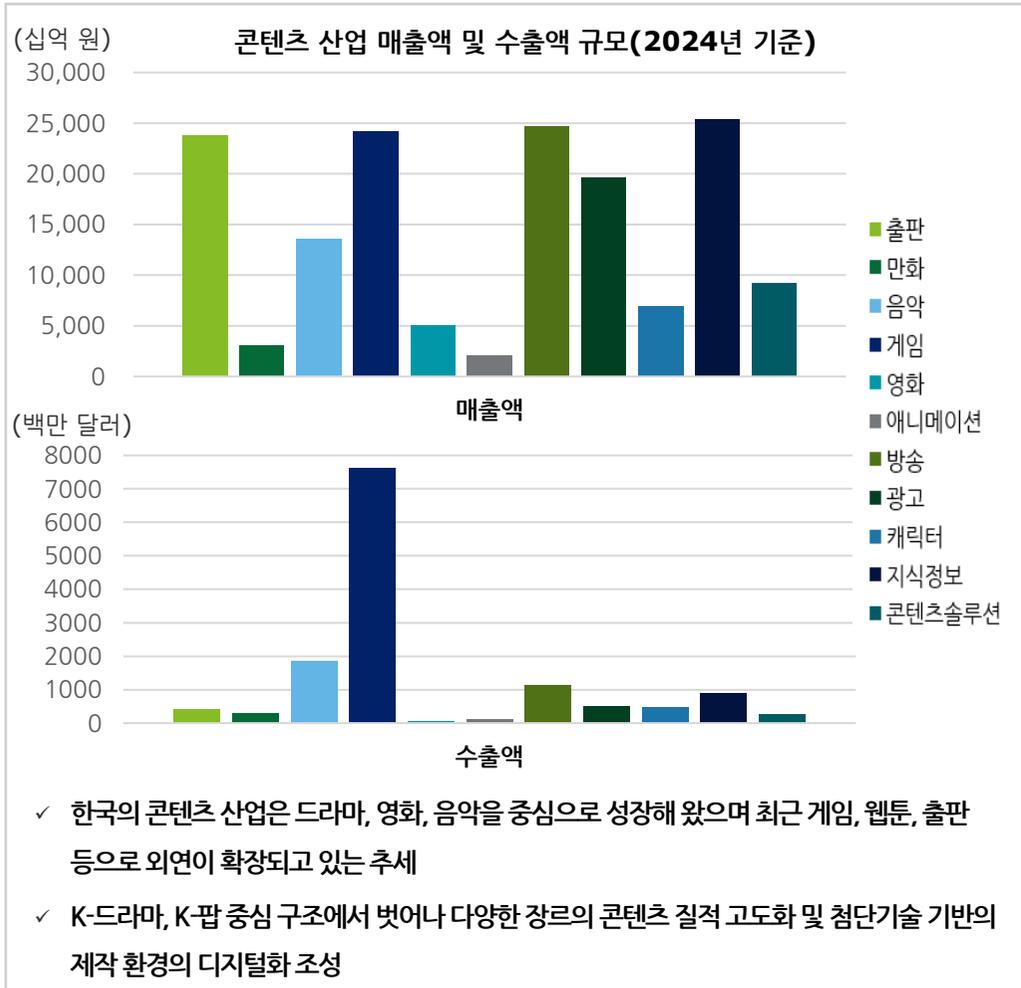
Source: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경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평가원.

III. 대한민국, 새로운 지평을 위한 9대 아젠다(Agenda)

5. 새로운 문화/소프트 파워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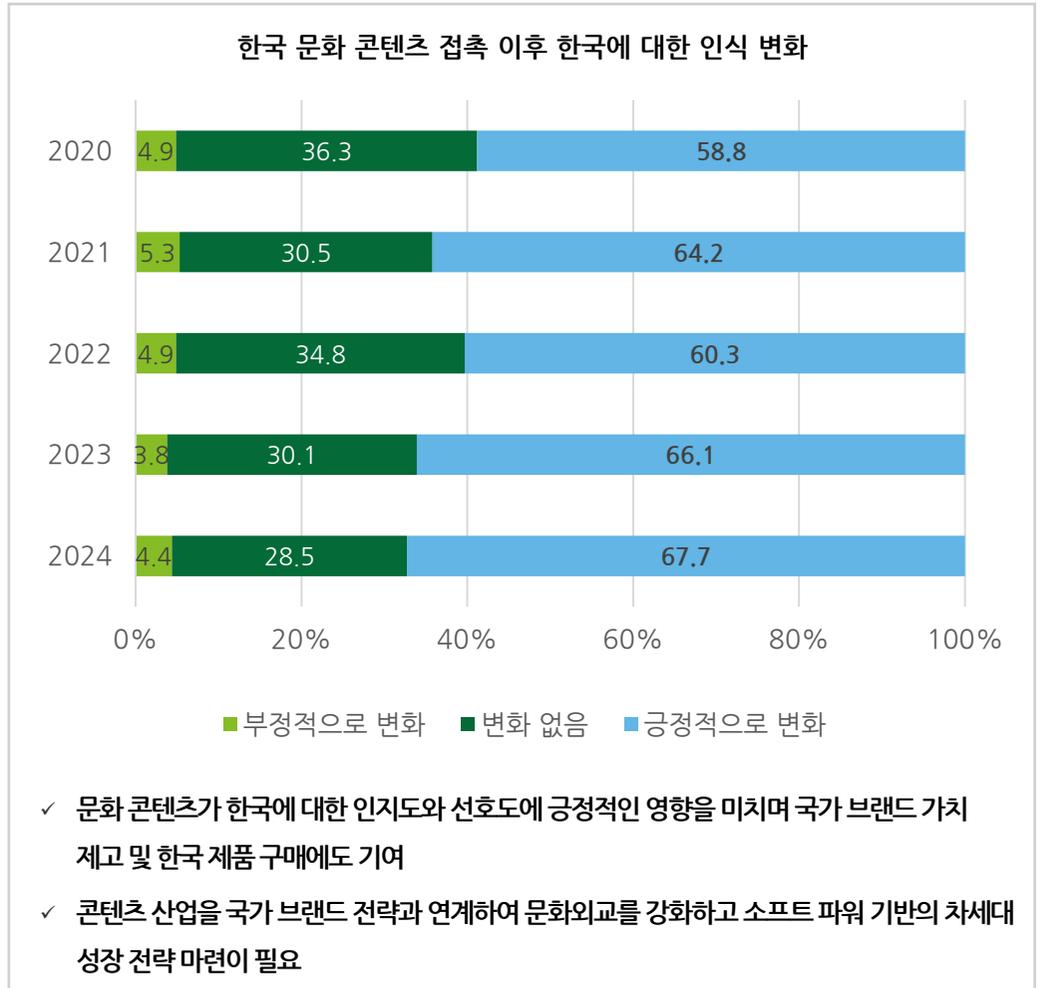
한국의 문화 산업은 드라마, 영화, 음악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루어 왔습니다. 일부 편중된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콘텐츠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국가 브랜드 전략과 연계한 문화외교를 추진하여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도약해야 할 것입니다.

K-콘텐츠의 편중된 구조



Source: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외교 확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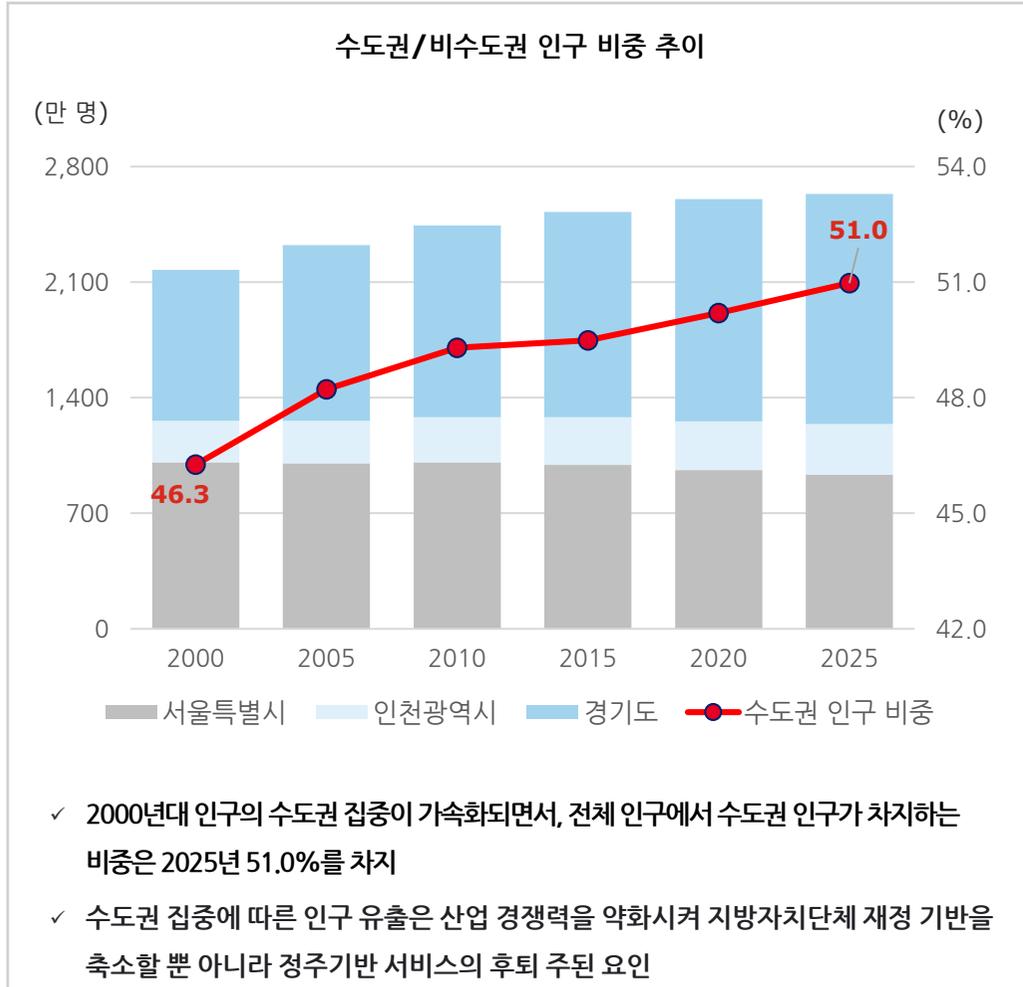
Source: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III. 대한민국, 새로운 지평을 위한 9대 아젠다(Agenda)

6. 로컬 균형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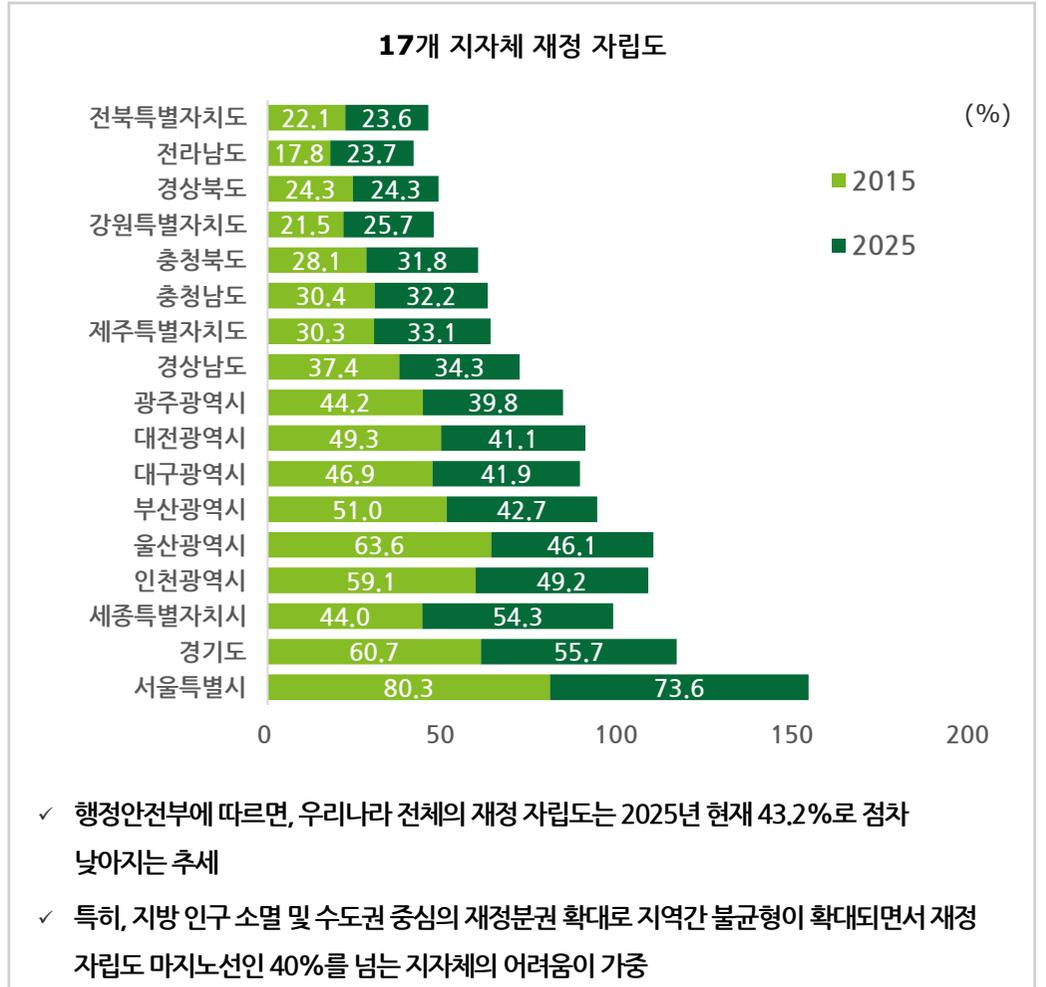
수도권에 편중된 인구와 자원 집중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지방의 재정 자립도 저하와 청년 유출은 지방 소멸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자생력 강화와 균형적 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더 벌어지는 지역 격차



Source: 통계청,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지방소멸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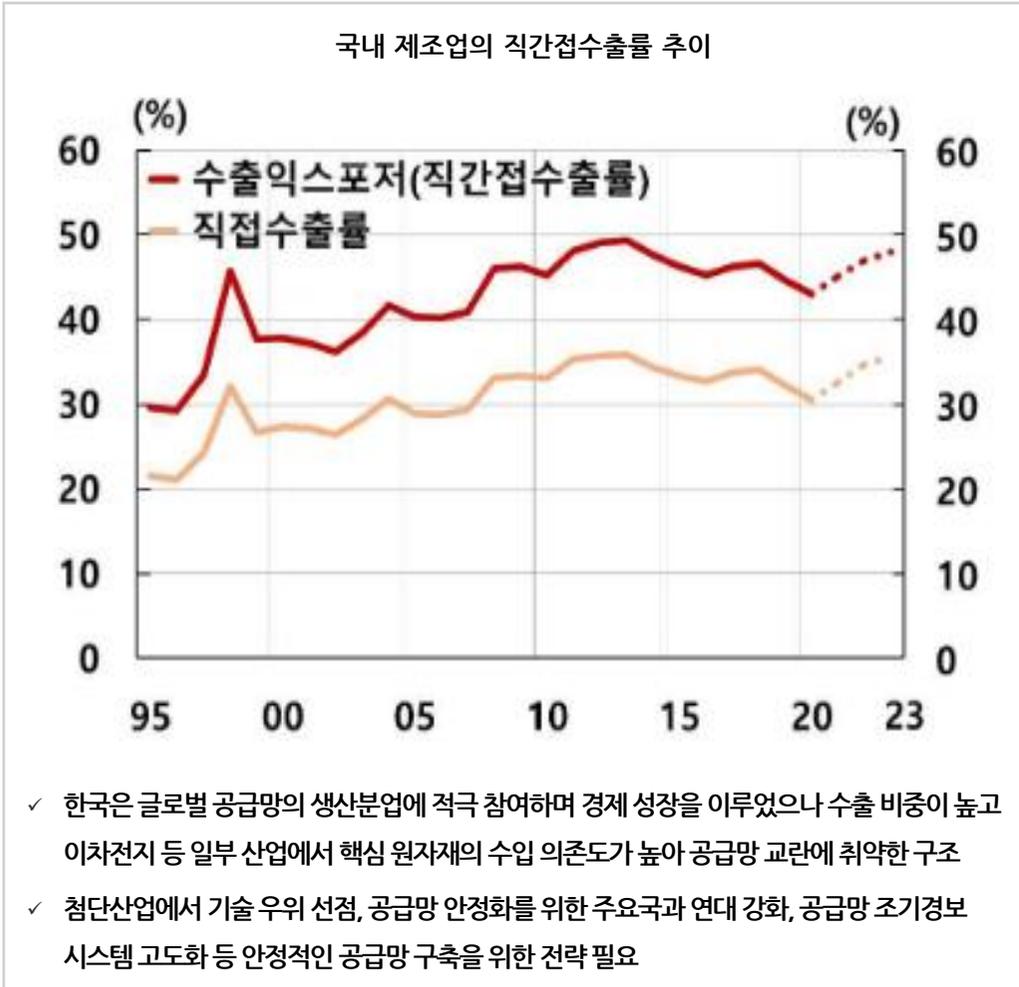
Source: 통계청,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III. 대한민국, 새로운 지평을 위한 9대 아젠다(Agenda)

7. 운영형 통상 및 경제 안보(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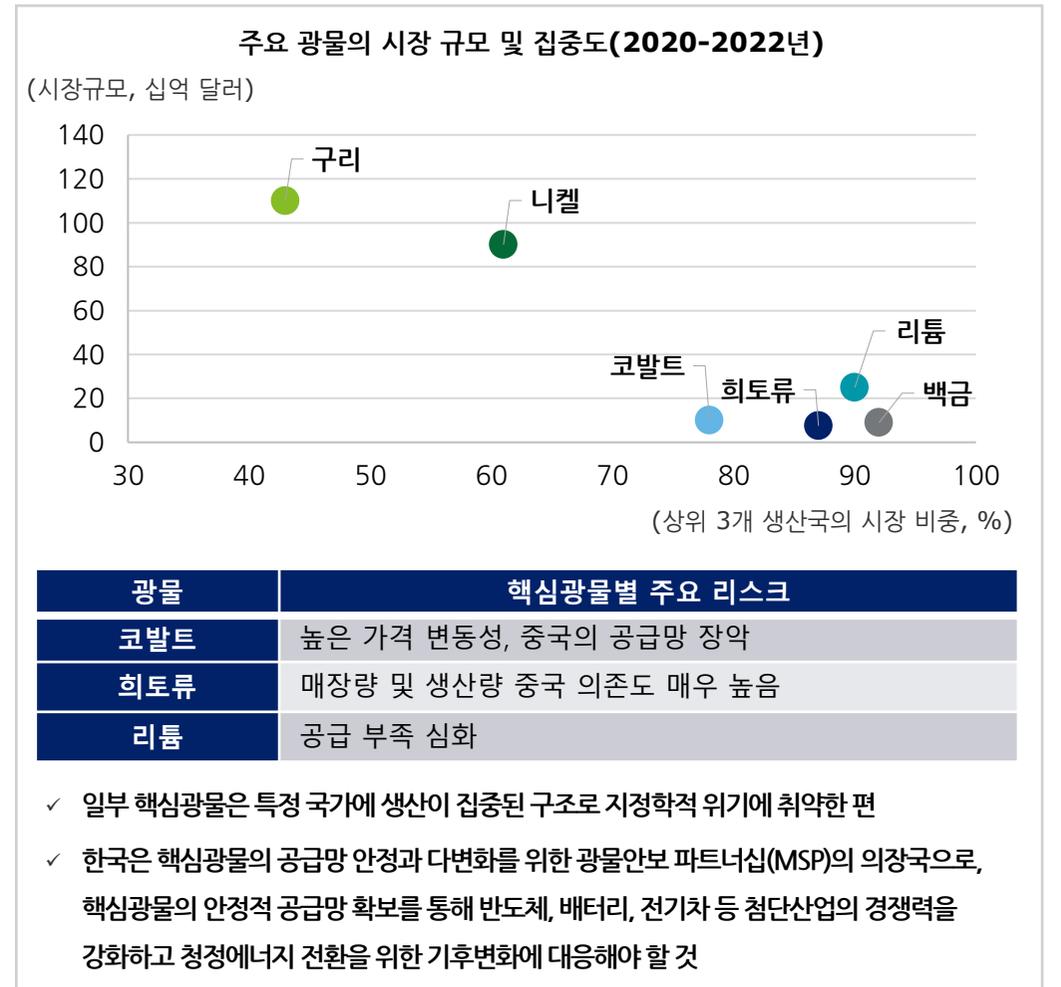
현재 글로벌 공급망은 미중 패권경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 정세 불안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재편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 안정적인 원자재·에너지 확보, 핵심품목의 국내 생산기반 강화, 국제 공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내 생산의 공급망 리스크 취약성



Source: 한국은행

핵심광물의 특정국 편중



Sourc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한국지질자원연구원

III. 대한민국, 새로운 지평을 위한 9대 아젠다(Agenda)

7. 운영형 통상 및 경제 안보(2/2)

한국은 59개국과 총 22건의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나 신흥시장과 협상을 가속화하고 아세안, 중남미,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공급망 다변화와 새로운 소비시장 확보를 위한 경제영토의 전략적 확장이 필요합니다.

신흥시장과의 FTA 협상 가속화

한국의 FTA 발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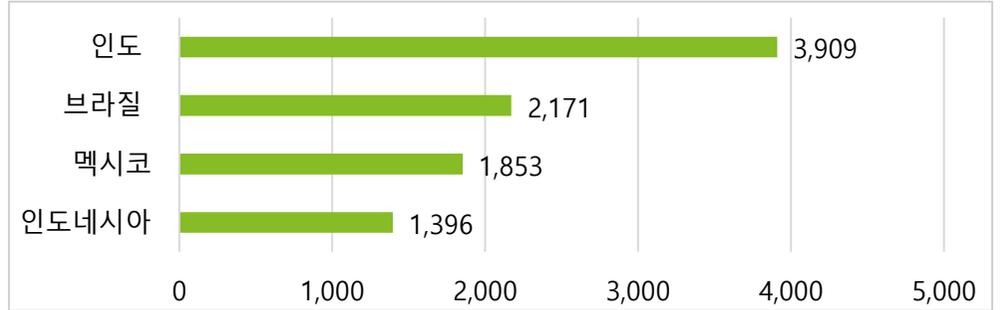


- ✓ 현재 59개국과 총 22건의 FTA 체결 중으로 말레이시아, 태국, 몽골 등 신흥시장과 협상 중
- ✓ GCC, UAE, 조지아, 에콰도르 등 기타결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추진하고 특정 국가품목에 편중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수출 다변화 전략 수립

Source: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사우스와 경제협력 확대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의 GDP 현황(2024년 기준) (십억 달러)



국가	글로벌사우스 관련 주요 정책 방향
미국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견제
EU	•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고자 Global Gateway를 통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전세계 인프라, 디지털, 환경보호 사업 투자
일본	• 아세안, 아프리카, 중남미와 경제외교 강화, JICA를 통해 인프라 및 인적 자원 투자
중국	• 일대일로, GDI(Global Development Initiative)를 통해 글로벌 사우스 연대 협력 강화 추진, 대규모 인프라 및 경제개발 프로젝트 시행

- ✓ 글로벌 사우스는 높은 경제성장률, 젊은 인구,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 권역으로 부상, 특히 이들 국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추세
- ✓ 글로벌 사우스 부상에 따른 국제질서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 디지털, 개발원조 등 지역별 및 분야별 맞춤형 대외정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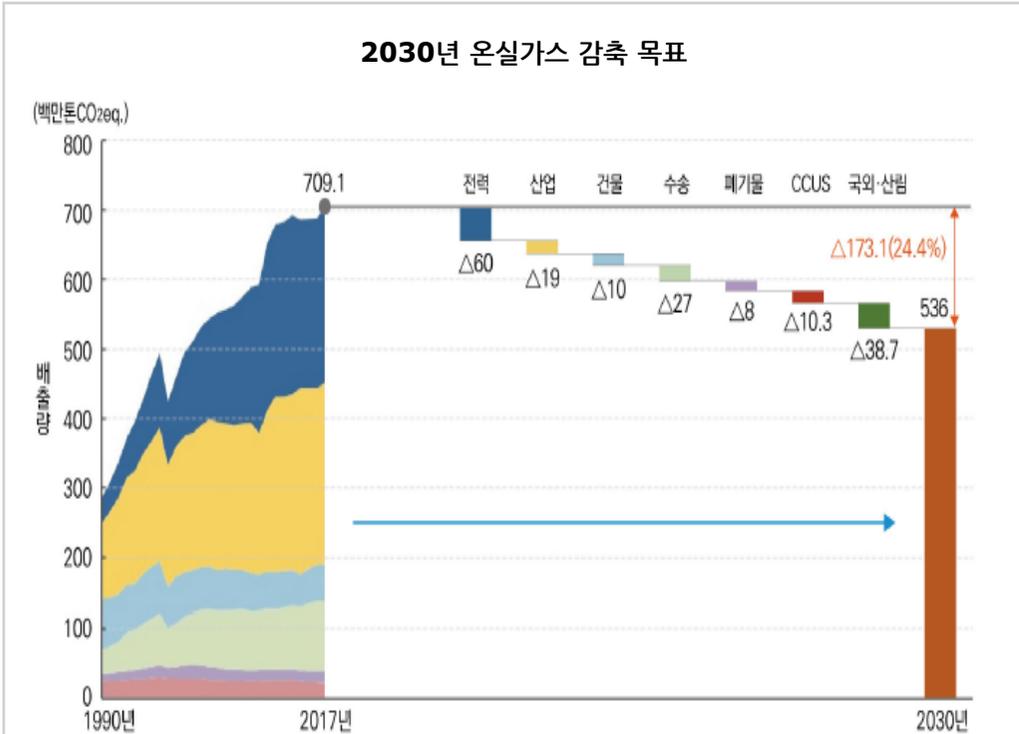
Source: IMF,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III. 대한민국, 새로운 지평을 위한 9대 아젠다(Agenda)

8. 지속가능한 탄소중립경제(1/2)

2050년 넷제로 목표를 선언한 한국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되는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 기술혁신 지원, 녹색금융 확대, 전환전략 마련을 통해 수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탄소중립 목표 이행



- ✓ 한국은 2016년 파리협정에 가입 후 2030년,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발전,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 로드맵 수립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통합적인 정책 수립, R&D 확대, 녹색금융 지원 등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함

Source: 대한민국 정부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 대응

주요국 환경 관련 규제 현황

-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돌입, 2026년 본격 시행
 - 탄소중립산업법(NZIA) 시행 중
 -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 시행 중
 - 디지털제품여권(DPP) 시행 예정
- 
 - 캘리포니아주 자발적 탄소시장 공개법(AB 1305) 시행 중
 - 청정경쟁법(CCA) 의회 발의 중
-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2027년 시행 예정

- ✓ 2023년 28차 UN 기후변화협약(COP28)에서 무탄소에너지(CFE)에 대한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으며 EU,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무역장벽이 강화되는 추세
- ✓ 태양광, 풍력, 수전해 등 탄소중립산업의 국산화 및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기술혁신 추진 등 우리 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책을 마련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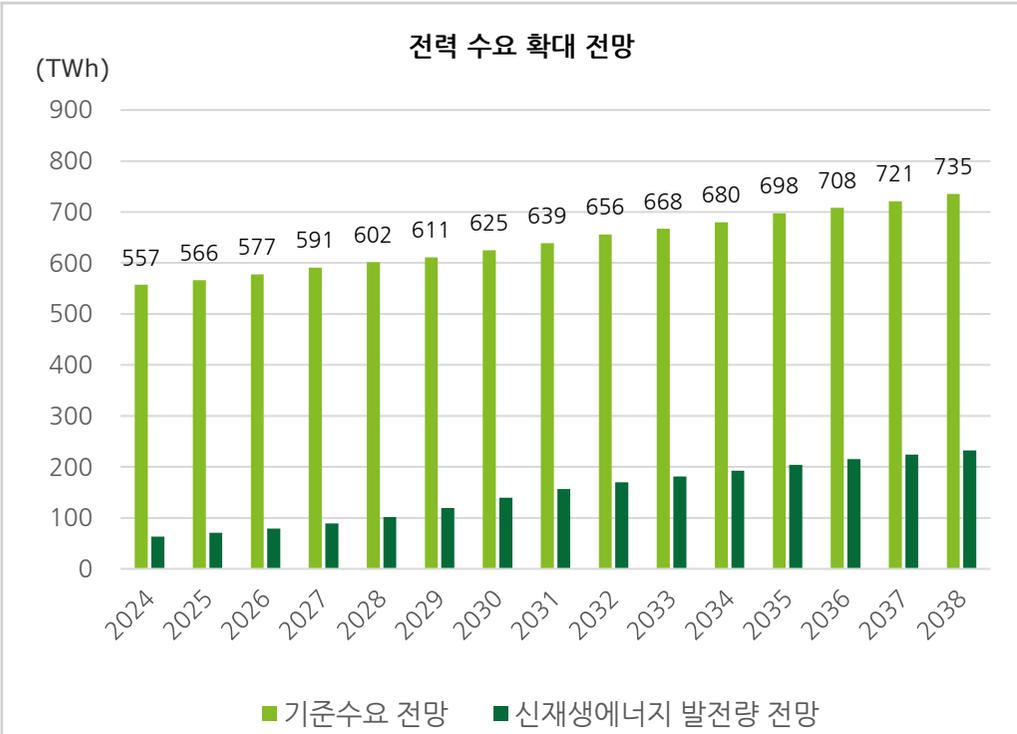
Source: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III. 대한민국, 새로운 지평을 위한 9대 아젠다(Agenda)

8. 지속가능한 탄소중립경제(2/2)

AI 등 첨단산업 발전으로 인한 전력 수요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유연한 에너지 공급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전국 전력망을 정교히 연결해 전력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무탄소에너지(CFE)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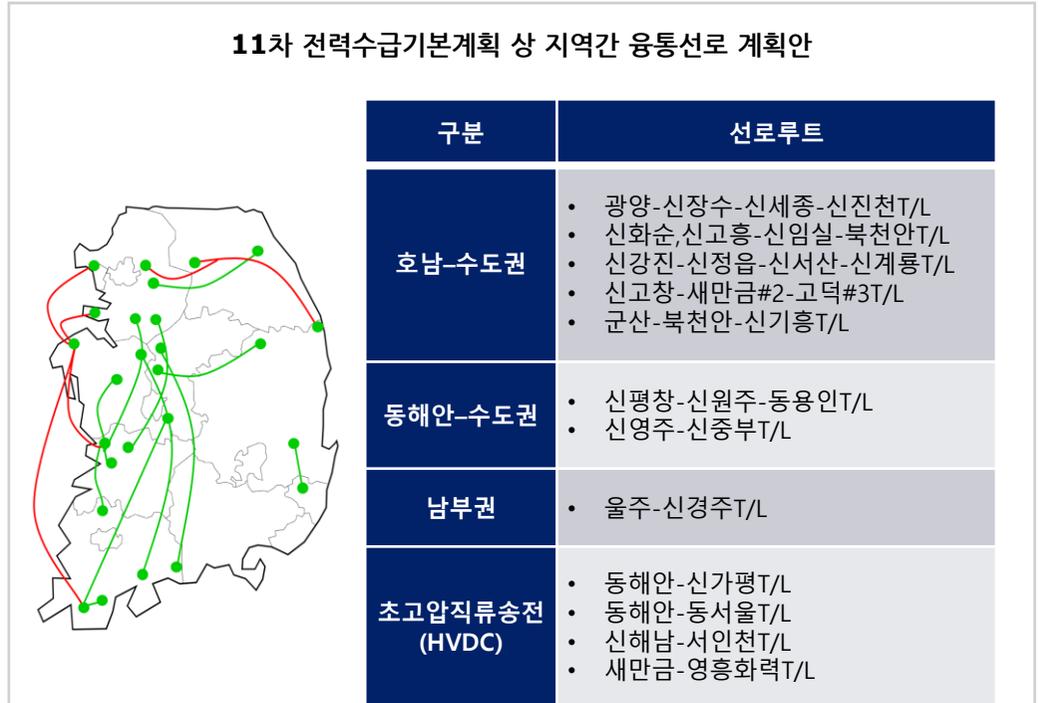
첨단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확대 대비



- ✓ 전기차,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 확보가 국가산업 전략의 핵심 과제로 부상
- ✓ 산업통상자원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계획기간(2024-2038년) 중 전력 소비량은 연평균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신규 발전설비 확충 계획 수립 필요

Source: 산업통상자원부.

전국 전력망 인프라 고도화



- ✓ 무탄소전원 보급 지역의 생산 전력을 타 지역으로 수송하기 위한 지역간 융통선로를 보강해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기반의 분산형 에너지 체계 강화
- ✓ 장기적으로 석탄, LNG 등 탄소 기반 발전을 축소하고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무탄소 발전으로 확대하되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한 에너지믹스 기반의 중장기 정책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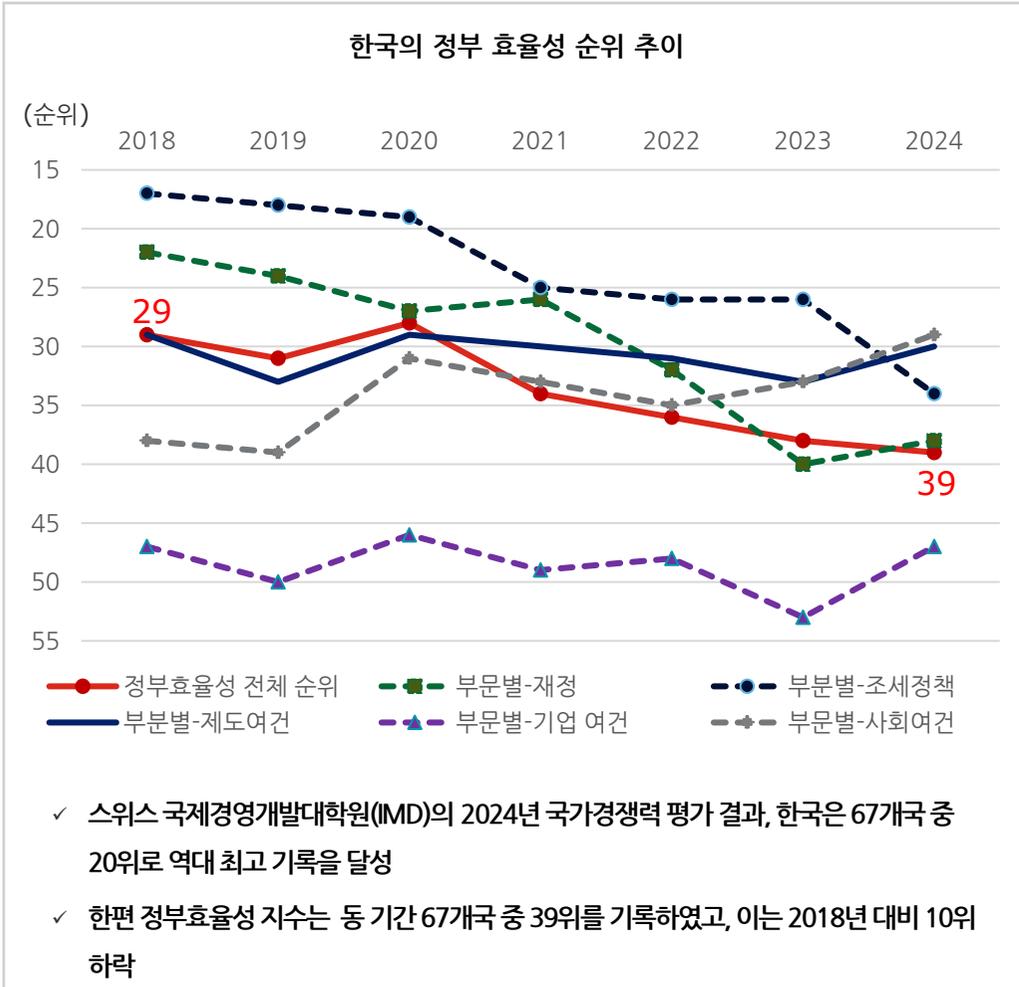
Source: 산업통상자원부.

III. 대한민국, 새로운 지평을 위한 9대 아젠다(Agenda)

9. 공평사회 및 신뢰 거버넌스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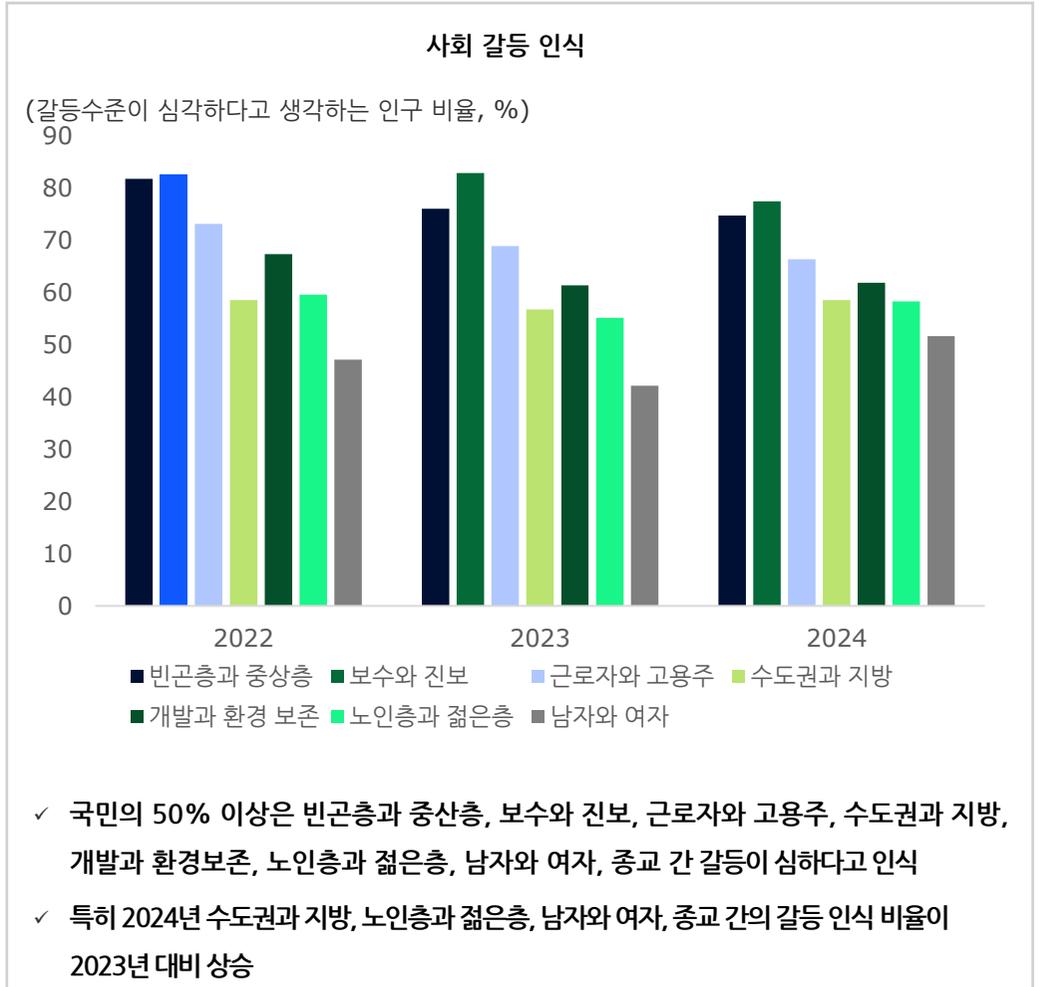
정부 효율성 회복과 사회 신뢰 재건은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 통합과 공공 신뢰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 효율성 제고 필요



Source: IMD

높은 수준의 우리 사회의 갈등



Source: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IV. 공약 분석 기반의 예상 시나리오

IV. 공약 분석 기반의 예상 시나리오

1.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분석 개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기존의 분배 중심 복지와 성장 중심의 정책을 넘어서 실용, 전환, 포용, 기술을 중심으로 국가시스템 재설계를 지향합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지평 '9대 아젠다'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연계

구분	이재명 대통령 공약과 연계	세부 추진 내용
대전환 성장 구조 (Transformative Grow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전략산업 집중 투자 중산층 복원 및 사회적 대타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잠재성장률 3% 목표, 중산층 복원, 추격형 모델 탈피 및 선도형 구조로 전환, 포용 성장 기반 재설계
한국형 산업고도화 (K- Industrial Le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AI·우주·바이오·방산 집중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구조 고도화, 제조업 부가가치 제고
민간 역동성 & 투자 활성화 (Market Dynamism & Investment Boo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 조정 검토 창업생태계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기업 지원, 소상공인 디지털화, 스타트업 인프라 강화 및 민간주도 경제 활력 회복
국가 기술 주권 확보 (Tech Sovereign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션지향형 R&D 개편 국민기술펀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 내재화, AI·로봇 등 초격차 기술 확보 및 국산화 추진
새로운 문화/소프트 파워 국가 (Cultural & Soft Pow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K-콘텐츠 생태계 강화광역공약 (서울, 경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K-콘텐츠 산업 지원, 문화산업 디지털 전환, 글로벌 한류 확산 전략, 창작 생태계 조성
로컬 균형 발전 (Balanced Regional Grow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균형 발전특별회계 신설 (100조 규모)혁신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혁신시스템(RIS), 수도권 집중 완화, 지방대 중심 거점 육성, 지방소멸 대응, 지역균형 클러스터, 지방 인센티브 강화
운영형 통상 및 경제 안보 (Operational Trade & Economic Secur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망 외교FTA 다변화 MSP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망 외교, 전략 기술 및 자원 확보, FTA 다변화, MSP(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참여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경제 (Carbon-Neutral Economy)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중립산업전략재생에너지 확산기후기금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50 탄소중립 실행력 강화 및 관련 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기금 조성, 탄소 규제 대응 전략, ESG 산업 활성화
공평사회 & 신뢰 거버넌스 구축 (Equitable Society & Trust - Based Govern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대타협기구 신설 감사원·검찰개혁시민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참여 기반 제도 신뢰 회복, 사회적 대타협 기구 신설

Source: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IV. 공약 분석 기반의 예상 시나리오

2. 입법/규제가 예상되는 환경 변화

산업전략법, 플랫폼 규제, 탄소중립 법제화 등 포괄적인 입법 및 규제 강화 등 환경 변화가 예상됩니다.

분야별 입법 및 규제 변화 전망

분야	정책 방향	입법/규제 변화
산업 전략	전략산업 집중 투자 (반도체, AI, 바이오 등)	전략산업 지정 법제화 또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 또는 개정 추진, 기술주권법, 국가 R&D 성과 관리 강화법 등 신설 가능
노동시장	일자리 보장·근로시간 단축·플랫폼 노동자 권익 강화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근로기준법 개정 또는 노동 3권 보장 강화, 중대재해법 시행령 보완
공정거래	대기업 갑질 근절, 플랫폼 공정화	공정거래법·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개정
AI·디지털 규제	개인정보·알고리즘 규제 강화	AI 기본법 또는 투명성 확보 법안,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
중대재해·산업안전	산업현장 안전 책임 강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확대, 안전관리 책임자 의무 강화 입법
에너지·환경	탄소중립 추진,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세 논의 본격화, 에너지기본법 개정, 수소경제법 강화
바이오/헬스	K-바이오·의료데이터 활용 강화	바이오헬스특별법 추진, 마이헬스웨이 고도화 입법 추진
가상자산/핀테크	투명한 시장 조성, 투자자 보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거래소 등록제 도입,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확대
조세·재정	조세 형평성, 부자감세 폐기	법인세 인하 철회, 금융·부동산 과세 강화, 재정준칙 입법 논의
통상·외교	공급망 외교, 경제안보법 제정	전략물자통제법, 경제안보특별법 등 신설 또는 개정 논의, FTA 다변화 관련 비준 강화, 통상조약 이행 관련 법률 정비

Source: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IV. 공약 분석 기반의 예상 시나리오

3. 주요 산업별 영향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국가 주도의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초격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 주권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한편, 대규모 플랫폼 기업 및 고탄소 산업은 공공성과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규제 강화로 구조적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지원 확대 산업

산업군	지원 근거 및 정책 방향
반도체·AI·첨단 ICT·이차전지	▶ 국가 기술 주권 전략 산업, R&D 대폭 강화 (미션지향형)
미래차(전기차·수소차 등)	▶ 산업전환 지원 및 충전 인프라 확대, 공공 조달 연계
바이오헬스·제약	▶ 국가 바이오헬스 전략산업 지정, 임상·신약 개발 지원
방위산업	▶ 방산 수출 지원 및 국산화 추진, 전략산업 육성 정책
K-콘텐츠·문화산업	▶ 글로벌 확산 지원, 저작권 보호 및 플랫폼 육성
탄소중립·그린에너지 (재생에너지, 수소 등)	▶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믹스 개편, 수소 산업 육성
지역특화산업군	▶ 지역균형 발전 연계, 지역 혁신 클러스터 육성
디지털 정부·공공서비스 (공공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시티)	▶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공 인프라 고도화

Source: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규제 강화 산업

산업군	제약 요인 및 공약 내용
플랫폼 기업	▶ 공정거래법 강화, 수수료 규제,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의무
부동산·건설	▶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공공택지 위주 공급, 민간 재개발 제한 가능
대형 금융기관·핀테크	▶ 가상자산 법제화·감독 강화, 감독범위 확대 및 공공규제 확대
고탄소 산업군 (정유, 석탄, 철강 일부)	▶ 탄소중립 전환 비용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

Source: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IV. 공약 분석 기반의 예상 시나리오

4. 예상되는 기업의 영향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따라 '규제 비용 증가'와 '제도 전환 비용'을 요구하는 동시에, 신산업 중심의 '인센티브 확대'와 '지역 중심의 투자 유인책'을 통해 산업 생태계의 구조적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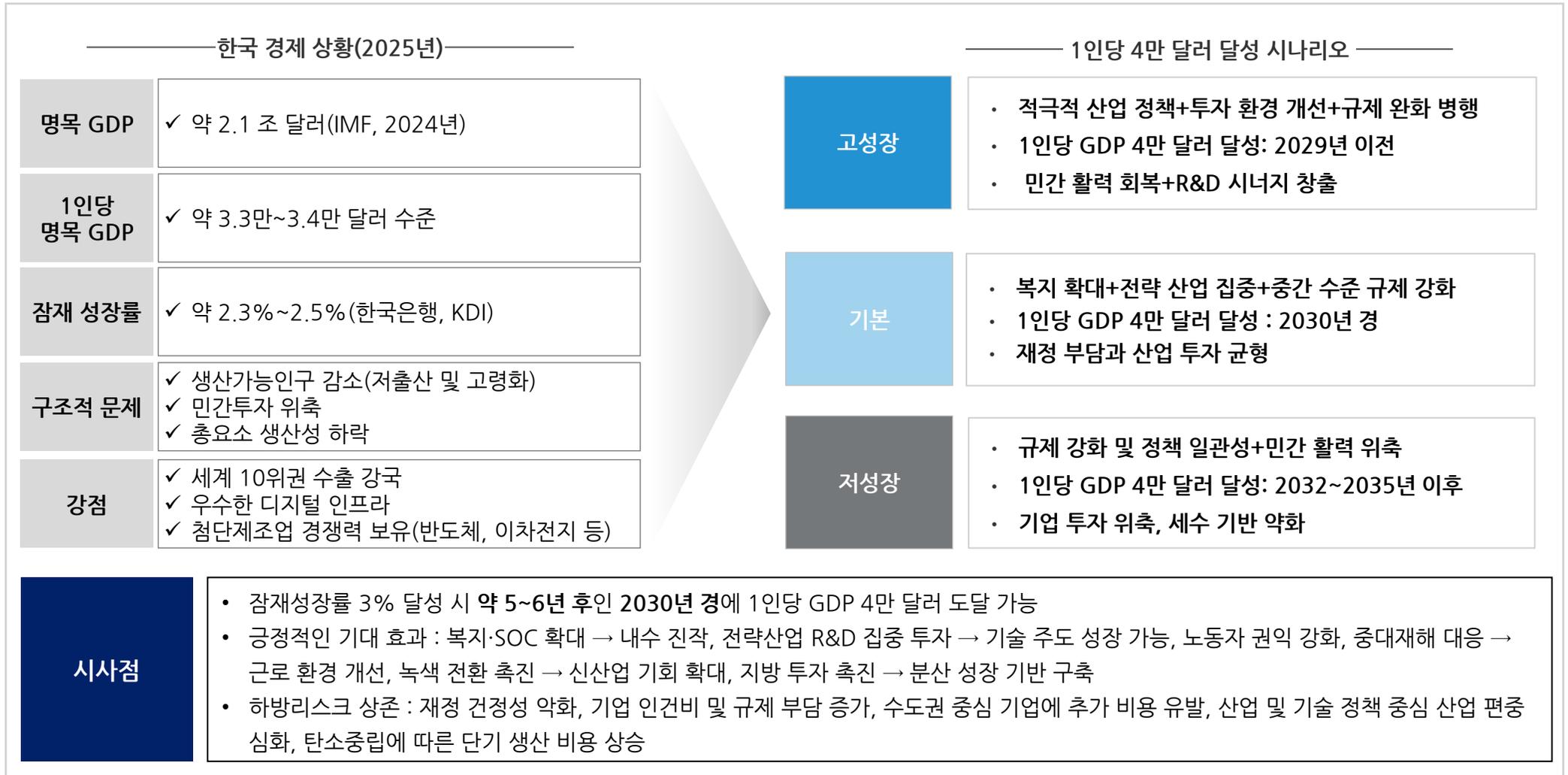
정책 영역	주요 변화 방향	예상 기업 영향
산업 전략	전략산업(반도체·AI·K-방산 등) 집중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업종 성장, 정부 주도 공동 R&D 참여 확대 ▶ 비전력 산업 분야는 상대적 소외 가능성 상존 ▶ 제약/헬스 부문 기업 투자 유인 확대(샌드박스 활용 등)
R&D/기술 정책	미션지향형 R&D, 국산화, 기술 주권 강조 AI 규제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가상자산 및 핀테크 거래소 등록제, 투자자 보호법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책 과제 방향 변화, 기술 내재화 수요 증가 ▶ 기술 기업 준법 리스크 확대 등 규제 준수 비용 증가
노동/복지	플랫폼 노동 포함 포용적 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유지·사회책임 요구 증가 가능성 ▶ 인건비 상승 및 유연한 고용계약 제약으로 비용 증가
지역 정책	지역 혁신체계(RIS), 지방 투자 유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투자 인센티브 확대, 본사 지방 이전 유도 가능
환경/탄소	탄소중립산업 육성, ESG 연계 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 규제 강화 대비 (제조업 탄소 비용 상승 등) ▶ 녹색기술 진입 유리
통상/외교	공급망 외교, FTA 다변화, 경제안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리스크 완화 + 전략적 GVC 재편 대응 필요
산업 안전/중대재해	기업 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현장 안전 비용 증가

Source: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IV. 공약 분석 기반의 예상 시나리오

5. 한국 경제 전망

이재명 정부가 규제 개혁과 민간 투자 유인 등을 병행하면서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린다면 2030년 전후로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민간 활력이 저해될 경우 구조적 저성장 고착 리스크도 상존합니다.



Source: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V. 기업의 대응

V. 기업의 대응(1/2)

이재명 정부 출범은 산업, 노동, 에너지, 규제 등 여러 분야에서 기존의 정책 프레임워크를 재구조화 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수동적인 대응보다 선제적으로 체계를 재정비하고 고도화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정책 변화의 속도와 실행력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부의 인센티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규제 대응 및 산업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연계되는 전략적 민관 협업 대응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전략 산업 집중 및 신사업 재편 (Strategic Repositioning)

- 정부 중점 산업과 연계한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협력 모델 적극적으로 구축
 - 반도체, AI, 바이오, 방산 등 국가전략 산업과 연계한 기술 로드맵 조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R&D 자원 배분이 필요(전략 산업 중심 재배치)
 - 정부 기금 및 정책 금융을 연계한 자금 조달 전략 병행
 - 공공과제 중심의 실증 사업 제안 확대 및 정부 협력 강화
 - 전략기술 분야 내 스타트업과 오픈이노베이션 강화
 - 기술 사업화 성과에 따른 투자 유치 및 M&A 전략 필요
 -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R&D 효율성 극대화
- 지역 균형 발전 기조에 따른 지방 혁신 거점 및 클러스터 연구 강화
 - 지역혁신기반 확보가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연계
 -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투자 확장 고려(지방 투자 인센티브 등 활용)

친환경 및 저탄소 전환 가속화 (Green Transformation)

- 저탄소 전환은 단순한 이미지 개선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
 - 글로벌 조달 및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탈탄소 기술 투자 선점
 - 녹색 기술 투자 및 사업 전환 로드맵 수립, 전력 소비 감축 투자 확대
 - 공급망 파트너사 탄소 배출 정보 관리 및 녹색 인증 연계

V. 기업의 대응(2/2)

이재명 정부 출범은 산업, 노동, 에너지, 규제 등 여러 방면에서 기존의 정책 프레임워크를 재구조화 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수동적인 대응보다 선제적으로 체계를 재정비하고 고도화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정책 변화의 속도와 실행력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부의 인센티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규제 대응 및 산업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연계되는 전략적 민관 협업 대응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p>공급망 리스크 관리 강화 (Supply Chain Resilien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원가절감형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복원력 기반 가치사슬’로 패러다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 물자 식별 및 대외 의존도 분석, 공급망 리스크 맵핑 정례화 → 다변화된 조달선 확보, 동맹국 중심 공급 네트워크 재설계 → 원산지 기준 강화 및 통상조약 조건 검토 위한 법률 및 관세 전문가 확보 → 디지털 기반 공급망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통상 리스크에 대한 시뮬레이션 및 민감도 분석 역량 확보
<p>규제 준수 체계 고도화 (Regulatory Compliance Reinforce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대응이 아닌 중장기적 규제 리스크 관리 체계가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수준 확보 → 입법 모니터링 강화 및 법안 지연 대비 탄력적 시나리오 수립 → 규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내 TF 운영 → 신규 규제 영역의 컴플라이언스 사전 분석 및 시뮬레이션 수행(비용과 시간 절감 관점 점검) ➤ 규제 샌드박스 활용, 지역 투자, 탄소감축 설비 등의 정부의 지원 제도 적극 검토 및 활용
<p>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생태계 조성 (Corporate Globalization & Ecosystem Develop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간 융합과 글로벌 전략 동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컨텐츠 산업과 융복합 전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글로벌 시장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 전략 수립 & 지역별 유통 채널 확보 ➤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조성 및 플랫폼 협력 구조 확대

감사합니다.

본 자료에 대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법무법인(유) 지평에게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강의를 무단 복제, 전재, 인용, 유포, 공개하는 것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로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의 책임을 지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